

ISSN 2734-0317

www.kita.net

KITA

통상 리포트

2024

VOL.10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이유진 수석연구원

한아름 수석연구원

KITA 통상리포트 2024 VOL.10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발행인 윤진식

편집인 조상현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발행일 2024년 9월 11일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Contents

요약

01. 배경	1
02.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4
03. 전략경쟁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18
04. 영향 및 대응	32

이유진 수석연구원 (02-6000-5649, yujin.lee@kita.or.kr)

한아름 수석연구원 (02-6000-5850, ariel.han@kita.or.kr)

※ 본 리포트 인용 시,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진영을 떠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대중 관세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 관세 100%까지 인상을 포함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전략산업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前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관세 등의 공약을 공세적으로 내세우며 1기 보다 더욱 강력해진 관세조치를 예고했다. 이와 같은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선거전략으로 당분간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조치와 공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점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다. 구체적 조치 강화 내용으로는 ▲신규조사 건수 증가,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일부 케이스에서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에 수준까지 근접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급격히 증가했던 신규조사 건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크게 줄었으나, '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1년간 총 107건이 개시되어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년(120건) 수준에 견줄 만큼 다수의 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건수 뿐만 아니라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정('24.4월 시행)으로, 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 불명료했던 특별시장상황(PMS)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상무부의 PMS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직접 보조금 지급 외에 재산권,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상황도 혜택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전보다 반덤핑·상계관세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밖에 '초국경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에 대한 조치 기반도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케이스에서 조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된 경우가 있어 조사대응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15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대상 품목을 알루미늄 압출재 뿐만 아니라 압출재가 포함된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자동차, 태양광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22.7월 이후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어 현재까지 3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는데, 미국이 비시장경제로 간주하는 중국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한국산 제품에까지 적용될 위험도 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전기차, 태양광 등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관세인상 조치가 대표적이다. 중국 공급과잉 문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핵심광물 등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였다. 대상 품목 다수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 동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이나,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IRA 등 다른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품목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 중국 의존도가 높지만, 단기간 내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미국 현지 우리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 조사 결과가 대선 전에 발표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가 추가될 경우 역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이 기존과 같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강이나 제련·주조국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관세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요건 강화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기술·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추진되고 있다. 적성국 기업과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산 완성차 뿐 아니라 센서, 소프트웨어, 통신모듈 등 다수의 부품과 기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중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3국산 차량까지도 규제될 수 있다. 태양광 분야는 IRA AMPC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수준이 조립 단계에 그치는 반면, 동남아산 패널 수입은 급증하자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었다. 동남아산 제품의 중국산 우회수출 긍정판정에 이어 최근 동남아 4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신규 개시되었으며, 양면형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조치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 주장도 있으나, 우리 기업이 되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인해 PMS 적용이 용이해지고 관세율 산정에 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었으며,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가 빈번해져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운스트림 기업의 경우 원재료나 중간재 조달비용 증가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트럼프 前대통령이 무역적자를 문제 삼는 시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높아지는 미국의 무역장벽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제3국으로 우회해 미국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4.1분기 중국의 해외투자'는 2,430억 위안으로 8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할 만큼 제3국 생산설비 투자가 눈에 띈다.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나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이 제3국 시장에 저가로 유입됨에 따라 해당국의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관세, 수입 쿼터 등 무역장벽도 늘어나고 있다.

1 배경

□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대중 관세 검토를 끝내고 전략산업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
-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관세, 자동차에 대한 추가관세 인상을 내세우며 트럼프 1기의 관세인상 정책을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24.4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 유세 당시 철강노조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대중국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3배 인상을 약속하는 등 강력한 국내 산업보호 의지를 표명

- 동 연설에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현행 7.5%에서 3배 수준 인상,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의 멕시코 경유 우회수출 문제 해결, 중국산 조선 분야에 관한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반대 등을 언급

□ 위 발언은 즉각 조치로 이어지며 노조 기반의 경합주에서 선거전략으로 활용

- USTR은 주요 전략 품목에 대한 대중국 301조 관세 인상안을 발표하고, 철강·알루미늄은 기존의 7.5%에서 3배 수준인 25%로, 전기차는 현행 25%에서 100%까지 인상(5/14 발표, '24년 중 시행 예정)
-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멕시코 경유를 주제로 Fact Sheet¹⁾를 발표(4/17)한 직후, 멕시코 정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발표(4/22)

* 동 Fact Sheet에서 백악관은 중국의 불공정 관행으로부터 미국의 철강 및 조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여 관세 회피 문제 해결을 지시

- USTR은 중국의 해운·물류·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를 개시(4/17)
-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하여 US스틸 주주의 압도적인 찬성과 EU의 승인도 있었으나, 미국 법무부의 추가자료 요청으로 심사가 연기되고 있으며, 11월 대선 이후에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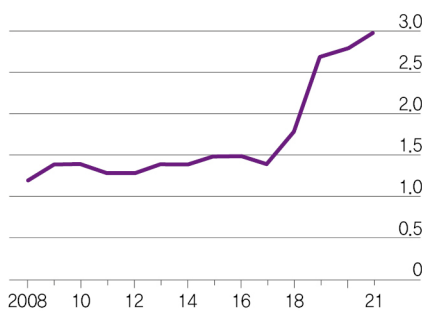
1) The White House(2024.4.17.),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2) Akane Okutsu(2024.5.9.), "U.S. Steel deal will have smooth road after election, Nippon Steel says", Nikkei Asia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맨(Tariff Man)’이라고 자칭하며 중국을 비롯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관세조치를 단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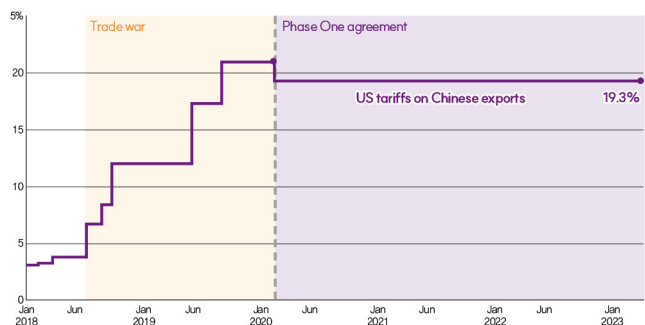
-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대중국 수입의 2/3에 이르는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25%의 301조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는 중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25%와 10%의 232조 관세를 부과
- 그 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신규 조사가 급증하였으며, 불리한 이용가능 정보 (AFA)와 특별시장상황(PMS) 등의 조사기법이 적극 활용되어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
- 2001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수입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
- '21년 미국의 전체 수입의 평균 관세율은 3%로 트럼프 집권 전과 비교해 두 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특히 중국에 대한 관세는 3%에서 19%대로 급증

〈그림1. 미국의 대세계 관세율 추이〉



자료: Economist

〈그림2.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추이〉



자료: Bown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대세계 10%, 대중국 60% 등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관세조치를 선언하며 ‘트럼프 1기’ 조치의 확대를 예고

- 미국 내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표명하며, 품목과 국가에 상관없이 전 세계 수입품을 대상으로 10%의 보편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힘
-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는 6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부 인터뷰에서는 100%까지 언급하는 등 이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함³⁾
- '24.3월 오하이오 연설 중 미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하며, 대선에서 트럼프 패배 시 자동차 산업과 미국 경제에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 경고⁴⁾

3) Nancy Cook, Joshua Green, and Mario Parker(2024.7.16.), "Trump on Taxes, Tariffs, Jerome Powell and More", Bloomberg

- 뉴저지 유세 연설에서 '24.5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관세인상을 늦은 조치라고 비판하며, 멕시코에서 중국이 생산한 전기차에 대해 2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⁵⁾
- **러스트 벨트에 위치한 경합주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고 양당의 보호주의 전략이 강화되고 있음**
 - 각각 철강과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펜실베이니아주와 미시간주 등 경합주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를 중시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301조 관세를 인상한 바이든 정부의 조치는 '관세맨(Tariff Man)'이라 불리는 트럼프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됨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10% 보편관세는 물가상승만 초래하는 반면, 바이든 행정부의 5월 301조 대중국 관세인상은 전략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⁶⁾
 - 트럼프 전 대통령도 유세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인상률을 100%에서 200%까지 크게 상향 조정하는 한편, 언론 인터뷰 시 대중국 추가관세도 60%에서 최근에는 100%까지 언급하는 등 급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인상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각종 수입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치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트럼프 행정부 당시 급증했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가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알루미늄 압출재 케이스와 같이 일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행정부의 무리한 조사방식과 조치 적용으로 수입국의 대응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음
 - '24년 수입규제 규정을 개정해 행정부 권한을 강화하여 반덤핑·상계관세 판정이 용이해지고, 덤핑 및 상계관세율이 더 높게 부과될 우려가 있음
 - 그 밖에 중국산 태양광 및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우회수출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발표했고, 커넥티드 카 규제안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301조 조사를 진행하는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
-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나 수입규제 조치 강화, IRA 및 반도체법 등의 각종 산업정책은 중국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조치들의 대한국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

4) Arit John, Kit Maher, and Alayna Treene(2024.3.17.), "Trump warns of 'bloodbath' for auto industry and country if he loses the election", CNN

5) Reuters(2024.7.19.), "Trump sanctions prompted China Xiaomi's EV entry, CEO says"

6) Andrew Duehren and Andrew Restuccia(2024.5.14.), "Biden Levies Sweeping Tariffs on China, Intensifying Trade Fight With Trump", The Wall Street Journal

2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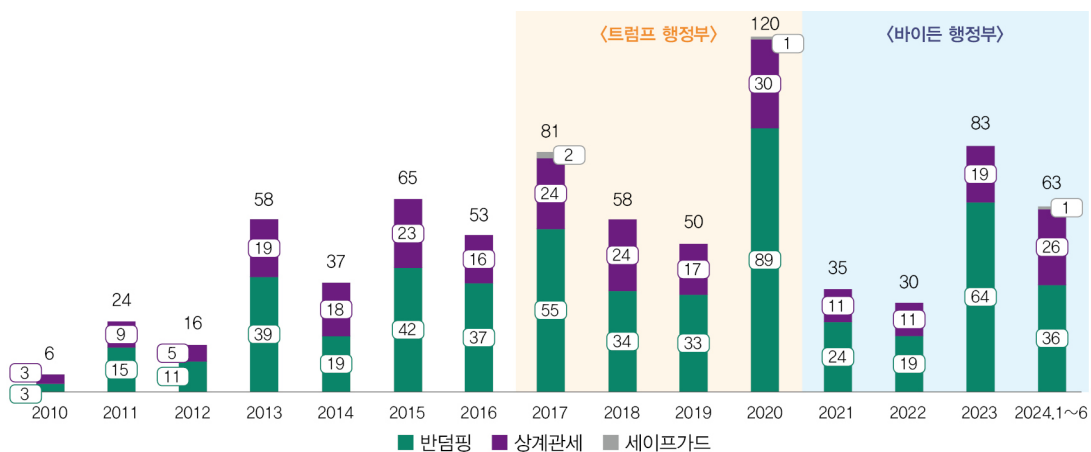
(1) 수입규제 신규 조사 건수 증가

-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의 수입규제 건수가 감소했으나, '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하며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까지 총 107건*을 기록

* 반덤핑 69건, 상계관세 37건, 글로벌 세이프가드가 1건으로 총 107건의 신규조사 개시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신규 조사건수가 '21년 35건, '22년 30건으로 감소했으나, '23년에는 83건(상반기 39건·하반기 44건)까지 증가하며 추세가 반전되었음
- '24년 상반기에는 반덤핑 36건, 상계관세 26건, 세이프가드 1건으로 총 63건이 개시되어 상반기 동안 총 75건의 조사가 개시된 '20년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
- '23년 하반기 44건, '24년 상반기 63건으로 12개월 동안 총 107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12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년 수준에 견줄 만큼 다수의 조사가 개시되었음

〈그림3.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 추이〉



자료: WTO Stats, 美 상무부 AD/CVD Case Information, USITC IDS

-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에 대한 조사가 가장 많았으며,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화학제품부터 소비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가 개시되었음

- (국가별) '23년 하반기에서 '24년 상반기까지 개시된 총 106건*의 반덤핑·상계관세 신규 조사 중 중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20건(반덤핑 10건, 상계관세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인도(13건), 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6건), 대만·인도네시아(5건), 멕시코(4건) 순

* 동 기간 개시된 총 107건의 신규조사 가운데 1건의 글로벌 세이프가드는 제외한 수치

〈표1. 대상 국가별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23.7월~'24.6월)〉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 시아	베트남	대만	인니	멕시코	튀르 키예	에와 도르	한국	기타	총계
반덤핑	10	7	5	4	3	4	2	3	2	2	2	25	69
상계관세	10	6	1	2	3	1	3	1	1	1	1	7	37
합계	20	13	6	6	6	5	5	4	3	3	3	32	106

자료: 美 상무부 AD/CVD Case Information, USITC IDS

- (품목별) 알루미늄 압출재 등의 철강/금속제품과 멜라민, 2,4-D, 디옥틸 테레프탈레이트 등의 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종이 접시, 냉동 새우, 매트리스, 와인병 등의 소비재 및 잡제품까지 조사대상이 다양화되었음
- 신규 조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년의 경우 주로 철강·금속 및 화학제품이 조사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차이를 보임

(2) 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

□ 美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의 집행과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24.3.)

- (일정) 상무부는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의 개정안을 발표('23.5.)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 수렴 후 일부 수정을 거쳐 최종 개정 규정 발표('24.3.) 후 시행(4/24)
- (주요내용) 특별시장상황(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관련 조항들을 명확히 하고, 외국 정부 무대응(inaction)과 초국경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에 대한 조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에도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와 범위조사(scope inquiry) 절차를 일부 조정하였음
- (평가) 새로운 규정은 상무부에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여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 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전망⁷⁾

□ (특별시장상황, PMS) 기존에 불명료했던 PMS에 대한 정의와 PMS 판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명확히 함에 따라 상무부의 PMS 활용이 더욱 빈번해질 전망

- '판매 기반의 PMS(Sales-based PMS)'와 '원가 기반의 PMS(Cost-based PMS)'로 유형을 나누어 PMS의 정의를 내렸으며, PMS 판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관련 절차 및 지침을 제시

7) David E. Bond, et al.(2024.4.16.), "United States Expands and Strengthens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White and Case

－ 판매 기반의 PMS 판정 시 정상가격을 계산하기 위해 구성가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원가 기반의 PMS 판정을 내리는 경우 상무부는 구성가치를 계산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음

* 덤핑율(덤핑마진)은 동종 상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 NV)과 수출가격(Export Price)을 비교하여 계산하며, 정상가격은 주로 수출국 내수 판매가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나 수출국 내 특별한 시장 상황(PMS)이 존재할 경우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CV)을 정상가격으로 적용해 수출가격과 비교

**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 CV)이란 조사대상기업이 제출한 회계장부를 토대로 생산원가에 합리적인 수준의 판매관리비, 이윤 등을 더해 조사당국(美 상무부)이 직접 산정한 가격으로, 통상적으로 구성가격 활용 시 덤핑마진이 높게 산정되어 수출국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

〈참고1. 개정 규정에 제시된 특별시장상황(PMS)〉

[판매 기반 특별시장상황 (Sales-based 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

- 정의 : 수출국 자국 시장 내 판매 가격과 수입국(미국) 내 판매가격(수출가격) 간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
- 예시 : 조사 대상 품목에 대해 수출세(export tax)를 부과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가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여 자국 시장 내 상품 가격이 공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원가 기반 특별시장상황 (Cost-based Particular Market Situation(PMS))]

- 정의 : 조사 대상 품목의 원재료, 제조, 기타 공정의 원가가 왜곡된 상황
- 예시 : 글로벌 과잉생산, 정부 소유 또는 통제, 정부 개입, 투입물에 대한 수출 제한, 투입물에 대한 수출세, 무역구제 조치 납부의 면제, 무역구제 조치 관련 정부의 세금 또는 관세 환급, 대상 상품 또는 투입물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국내 생산품 사용/지재권 공유/기술 이전 등에 대한 정부 명령, 재산권(지재권 포함)·인권·노동·환경 관련 보호 제도가 미비하거나 마련되지 않은 경우, 비경쟁적 합의/가격담합/독점/과점/전략적 제휴/제3국 덤핑과 같은 인간의 행위

자료: 美 연방관보(Federal Register)(2024.3.25.)과 상무부 ITA(2024.5.9.) 자료 참고하여 작성

- 이전에는 구체적인 법적 지침이 부재한 가운데 PMS 판정 근거의 상당수가 상무부 재량에 맡겨짐에 따라 상무부 판단이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했음

－ 2015년 개정에서도 조사당국(美 상무부)의 판단 하에 거래가격과 수출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불가능한 특별시장상황(PMS)이 존재하는 경우 수출국 내 거래가격의 대안으로 구성가격(CV)을 적용하도록 허용하였으나, PMS의 정의나 세부적인 검토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음⁸⁾

8) 정혜선(2018),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리포트 Vol.13

- 2017~20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내려졌던 PMS 판정은 바이든 행정부에 개시된 재심에서 반복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는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PMS가 존재한다는 결정에 이르기 위해 충분한 증거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⁹⁾
 - 신규 규정은 과거 PMS 판정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국제무역법원(CIT)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판정을 참고하여 PMS 판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요건을 표준화한 것으로 보임¹⁰⁾
 - 신규 규정은 과거 상무부 판정이 반복되었던 법원 판결을 참고해 핵심 투입물이 과잉 생산되거나 국영기업 및 기타 공공기관이 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통제하는 경우 등을 PMS의 예시로 제시
 - '24.3월 개정을 통해 원가 왜곡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량화하지 않고도 원가 기반의 PMS 판정을 허용하는 등 결과적으로 상무부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해 PMS 혐의가 확대될 소지가 있음¹¹⁾
 - 특히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이 원가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를 기반으로 PMS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PMS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반덤핑·상계 관세율이 인상될 우려가 있음
- (정부의 무대응(inaction))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외에도 재산권(지재권 포함), 인권, 노동권, 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상황을 수출국의 가격과 원가가 왜곡된 근거로 간주하여, 이전보다 높은 반덤핑·상계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음¹²⁾
- 보조금 지급과 같은 외국 정부의 대응(action)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무대응(inaction)'도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간주
 - 이는 외국의 경쟁업체가 미국 기업과 동일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고 있음을 수십 년간 주장해온 미국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¹³⁾
 - 기업에 부과된 수수료, 벌금, 과태료 등을 징수하지 않아 정부가 포기한 수익을 경제적 기여로 간주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재산권·인권·노동권·환경보호 관련 불충분한 규제 시행으로 기업의 원가와 가격이 왜곡되어 낮게 책정되는 경우에도 기업이 혜택을 부여받은 것으로 판단
 - 전자의 경우는 기존 관행에 따라 상계관세 조사에서 상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간주되었으며, 금번 개정에서 기존의 관행을 명문화¹⁴⁾

9) 김경화(2022), "바이든 정부 1년,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전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리포트 Vol.1

10) Bernd G. Janzen, et al.(2023.5.22.), "Proposed Regulations May Significantly Expand Commerce's Enforcement Ability of Trade Remedy Laws",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11) Katherine Shin and Eric C. Emerson(2024.7.1.),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New Regulations in DOC Antidumping Proceedings", Steptoe

12) David E. Bond, et al.(2024.4.16.), op.cit.

13) Brett Fortnam(2024.3.22.), "Commerce finalizes sweeping changes to U.S. trade remedy regulations", Inside U.S. Trade

- 이에 추가하여 다른 관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지불했을 ‘규제 준수 비용(cost of compliance)’을 지불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금번 개정을 통해 규제 조항을 신설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정부의 무대응’은 ▲상계관세 조사에서 ‘벤치마크 가격(benchmark price)’을 인정하지 않고, ▲비시장경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가격(surrogate value)’을 인정하지 않고, ▲시장경제 반덤핑 조사에서 원가 기반의 PMS를 판정하는 근거가 됨

〈참고2. ‘정부의 무대응’ 판정 시 반덤핑·상계관세를 산정 방법〉

[상계관세 조사에서 ‘벤치마크 가격(benchmark price)’ 불인정]

- 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당국(美 상무부)은 외국 정부가 해당국 내 생산자에게 투입물을 ‘적정가 미만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으로 판매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해당국 내 생산자가 받은 경제적 기여를 계산하기 위해 조사당국은 생산자가 해당 투입물에 대해 지급했어야 할 ‘벤치마크 가격(benchmark price)’을 결정해야 함
- ‘벤치마크 가격(benchmark price)’으로 제3국 내 해당 투입물 거래가격을 활용할 수 있음
-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이해관계자가 ‘벤치마크 가격(benchmark price)’을 도출한 국가의 재산권·인권·노동권·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며, 이러한 ‘정부의 무대응’ 상황이 투입물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조사당국은 ‘벤치마크 가격(benchmark price)’을 배제할 수 있음

[비시장경제 반덤핑 조사에서 ‘대체가격(surrogate value)’ 불인정]

- 반덤핑 조사에서 일부 국가는 기준에 따라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y)로 분류됨 (중국, 벨라루스, 베트남, 러시아 등이 美 상무부가 지정한 비시장경제 국가)
- 정상가격(NV)과 수출가격(Export Price) 간의 비교를 통한 덤핑마진 산정 시, 비시장경제를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정상가격(NV)으로 비시장경제 국가 내수 가격 및 생산비용에 관한 정보를 일절 인정하지 않고, 美 상무부가 선정한 대체국가(surrogate country)의 생산요소 가격을 토대로 정상가격(NV)을 산출
 -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에는 인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요소 가격을 이용해왔음
- 개정된 규정에서는 재산권·인권·노동권·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대체가격(surrogate value)’이 왜곡된 경우 상무부가 반덤핑 판정에서 해당 대체가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

[시장경제 반덤핑 조사에서 ‘원가 기반의 PMS(Cost-based PMS)’ 판정]

- 조사대상국 내 재산권·인권·노동권·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하여 생산원가의 왜곡이 있는 경우 ‘원가 기반의 PMS’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됨

자료: 美 상무부 ITA(2024.5.9.)와 정혜선(2018)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저자 작성

14) James E. Ransdell, Maggie Monday, and Myles S. Getlan(2024.4.4.), “Commerce Regulations Update Scope/Circumvention Procedures, Clarify CVD Practice”, Cassidy Levy Kent(CLK)

- 다만 상무부는 정부 재산권·인권·노동권·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부족한 상황에 대한 정의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정부의 무대응'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기반(fact-specific)하여 케이스별로(case-by-case) 이루어질 것이라 강조¹⁵⁾

* 예를 들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강제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활용하여 외국기업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생산한 기업이 있다면, 비시장경제국 반덤핑 조사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대체가격(surrogate value)'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논리적이고 합당한 조치'라고 설명

- 상무부는 다른 국가의 관련 규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나, 글로벌 경찰 역할을 하거나, 미국의 특정 정책 방향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에 대한 표준을 세우기보다는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케이스별로 판단하겠다는 입장

□ (초국경 보조금)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은 제3국 정부가 수출국 소재 기업에 제공한 '초국경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제한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상기 조항을 폐기

- 상무부는 보조금 관행이 변화함에 따라 '초국경 보조금' 조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으며, 이러한 변화의 예시로 중국의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전략을 언급
 - 최근 정부 보조금은 초국경 지분투자, 기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해외 원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
- 상무부는 초국경 보조금이 수혜국뿐만 아니라 공여국의 제조 능력을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초국경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국영은행의 지원을 받은 국영기업이 제3국에 투자하여 공여국의 산업정책을 촉진한 사례가 있었음을 설명
- 다만 상무부는 초국경 보조금의 혐의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초국경 보조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것이라 언급
 - 명확한 지침 부재로 논쟁의 여지가 커 조사대상국 정부의 WTO 제소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¹⁶⁾
- 말레이시아산 유틸리티 풍력타워(Utility Scale Wind Towers)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국은 '23.9월 중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이미 초국경 보조금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¹⁷⁾

15) David M. Schwartz and Aaron C. Mandelbaum(2024.3.28.), "Commerce Finalizes Major Overhaul of U.S. Trade Remedy Regulations", Thompson Hine

16) Shawn M. Higgins and Rajib Pal(2024.4.10.), "Final Amendments to Trade Remedies Regulations May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Sidley

17) Brett Fortnam(2024.4.4.), "Commerce's lifting of transnational subsidy case restriction raises questions", Inside U.S. Trade

(3)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

-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대상 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미국 국내외 이해관계자들의 수많은 의견개진이 이어짐

〈표2.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요〉

규 제 유 형	반덤핑/상계관세
제 소 일 자	2023.10.4.
제 소 자	미국 알루미늄압출연합(USAEC), 미국 철강노조(USW) 등
조 사 개 시	2023.10.24.
대 상 국 가	15개국 - (반덤핑) 한국,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튀르키예, UAE, 베트남 - (상계관세)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튀르키예
대 상 품 목	알루미늄 압출재(Aluminum Extrusions) - 미국 알루미늄 협회에서 발표한 합금번호 중 1,3,6번으로 시작하는 알루미늄 압출재(형태, 마감, 추가공정, 다른 부품과의 조립여부, 코팅·도색·양극화·열처리 무관) - 非알루미늄 압출재와 함께 큰 제품의 하위 부품으로 수입된 경우도 포함(조립여부 무관) - 큰 제품의 하위 부품으로 수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에서 제외(예: 자동차, 가전 등) - 압출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 - 수입된 제품에서 알루미늄 압출재가 해당하는 만큼 관세 부과 - 2011년 중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해당 부과 대상은 제외

자료: 美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알루미늄 압출재 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압출재가 포함된 제품까지 포함하여 대상품목의 범위가 광범위해 기업이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 관세 납부액을 계산하는 데 애로 발생
 - 알루미늄 압출재가 非알루미늄 압출재와 결합하여 부품이나 조립품의 형태로 수입된 경우도 범위에 포함되어, 자동차·태양광 패널·가전·가구의 부품 및 조립품까지 조사대상
 - 非알루미늄 제품과 결합하여 수입된 경우 수입자는 전체 수입품에서 알루미늄 압출재가 차지하는 비중과 압출재가 압출된 국가(원산지)를 파악해야 함
 -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수많은 하위 부품을 1, 2, 3차 혹은 그 이하의 벤더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모든 부품에서 알루미늄 압출재 포함 여부와 그 비중, 원산지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대상품목 범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USITC 및 상무부 예비판정이 내려졌음에도 현재까지도 품목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음
 - 조사개시 이후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기한 내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관련 의견이 다수 등록되었음

- 이에 제소자 측에서 상무부에 대상 품목의 범위 조정을 요청('24.2.20.)했으며, 57쪽에 걸쳐 예외 품목의 예시를 사진과 함께 제시
- 상기 제소자 요청과 관련해 상무부는 상계관세 예비판정에서 수용 여부를 5월 반덤핑 예비판정 때까지 결정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제소자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추가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밝힘('24.3.5.)
- 반덤핑 예비판정('24.5.2.)에서 상무부는 2월 제소자가 요청한 범위 조정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였으며, 5월 말까지 추가로 이해관계자와 제소자의 의견 수렴 계획을 밝혔으며, 최근까지도 품목 범위와 관련해 의견이 접수되고 있음
- 의무답변자 및 알루미늄 압출재 생산업체 외에도 자동차, 태양광, 다운스트림 소매업계 등에서 미국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도 우려 표명
 - '미국 자동차 정책협의회(AAPC)', '미국 수입자동차협회(ADA)' 등 자동차 단체와 테슬라, 현대차그룹은 대상 품목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실제 집행이 어려운 점을 지적
 - * '미국 자동차 정책협의회(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AAPC)'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 GM, 스텔란티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 ** '미국 수입자동차협회(Autos Drive America, ADA)'는 현대·기아를 비롯해 폭스바겐, BMW, 벤츠, 도요타, 혼다 등 미국 내에서 영업 중인 12개의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Solar Energy Industries Association)'와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인 한화큐셀, 공급업체인 선런(Sunrun) 등은 동 조사가 태양광 패널 부품 조달에 어려움을 유발하여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IRA 법안과 상충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대상 범위에서 태양광 모듈·패널 등을 제외할 것을 요청
 - * 태양광 업계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제소자는 품목 범위 조정 요청에서 제외 품목의 예시로 태양광 패널을 명시하였으며, 상무부도 이를 받아들여 대상 품목 범위에서 태양광 패널을 제외함('24.2.20.)
 - 미국 가전 제조업체 월풀(Whirlpool)과 모터사이클 및 소형차 제조업체인 폴라리스(Polaris), 독일 기반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말레(Mahle), 글로벌 가구 제조·유통업체인 이케아에서도 의견을 개진했으며, 美 유통업체 타겟(Target)과 홈디포(Home Depot)도 품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
- 동 조사와 관련해 다운스트림 업계의 영향을 우려하는 내용과 이와 상반되어 국내 산업 보호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상·하원 의원들이 상무부에 서한을 발송
 - 캔자스, 버지니아 등의 의원들은 다운스트림 산업과 소비자에 대한 부담 등을 우려하며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된 품목 범위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

-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에서는 수입 급증으로 미국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무부에 수입산 알루미늄 압출재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캠프의 부통령으로 지목된 JD 뱅스도 미국 국내산업 보호를 주장하며 알루미늄 압출재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품에 조치 부과를 촉구하는 의견서에 서명

〈표3.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상·하원 의견서 제출 현황〉

반대 (다운스트림 업계 영향 우려) 측		
의견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내 제조기업과 소비자에 부담이 됨 • 하위 부품에 포함된 압출재의 생산자와 원산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움 • 관세청을 비롯한 정부 기관의 집행과 검증에 과도한 행정력 소요 • 미국 내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성에도 부정적 영향 • 다운스트림 제품을 제외하고 알루미늄 압출재로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청 • 태양광 및 자동차 등의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음 • 제조자에 다운스트림 제품 생산자가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 위법 여지가 있음
의원 리스트	상원	제리 머랜(캔자스), 로저 마샬(캔자스), 마크 워너(버지니아), 팀 케인(버지니아)
	하원	제이크 라터너(캔자스), 케빈 현(오클라호마), 톰 콜(오클라호마), 배리 무어(앨라배마), 글렌 그로스만(위스콘신), 브라이언 스테일(위스콘신), 스콧 피츠제럴드(위스콘신), 톰 티파니(위스콘신), 데릭 반 오든(위스콘신), 버디 카터(조지아), 잭 버그만(미시간)
찬성 (국내산업 보호 주장) 측		
의견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알루미늄 산업이 14개 조사대상국 수입품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 • 조사대상 기간 동안 해외 수입은 40% 이상 증가한 반면 미국산 점유율은 11% 감소 •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할 필요 • 알루미늄 압출재는 일상 제품부터 방위 시스템까지 사용되어 국가안보에 필수적
의원 리스트	상원	세러드 브라운(오하이오), 마이크 브라운(인디애나), 밥 케이시 주니어(펜실베이니아), 존 패터만(펜실베이니아), 에이미 클로버사(미네소타), 제프 머클리(오리건), 게리 피터스(미시간),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버니 샌더스(버몬트), 티나 스미스(미네소타), 데비 스태브노우(미시간), JD 뱅스(오하이오),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하원	도널드 노르크로스(뉴저지), 존 로스(테네시), 그렉 랜즈만(오하이오), 스테파니 바이스(오클라호마), 라자 크리스티나무르티(일리노이), 맷 카트라이트(펜실베이니아), 트로이 카터(루이지애나), 프랭크 J. 모르반(인디애나), 마크 베세이(텍사스), 팀 월버그(미시간), 더스티 존슨(사우스다코타), 발 호일(오리건), 데비 딘젤(미시간), 베스 반 듀인(텍사스), 엘리사 슬롯킨(미시간), 마크 포칸(위스콘신), 콜린 올레드(텍사스), 맥신 워터스(캘리포니아), 로사 델라우로(코네티컷), 헤일리 스티븐스(미시간), 루벤 갈레고(애리조나), 잰 셔카우스키(일리노이), 자레드 골든(메인), 폴 톤코(뉴욕), 니키 버진스키(일리노이), 브렌던 보일(펜실베이니아), 크리스 델루지오(펜실베이니아), 빌 파스크렐(뉴저지), 프랭크 팔런(뉴저지), 마시 캅투르(오하이오), 로 칸나(캘리포니아), 앤지 크레이그(미네소타), 베티 맥컬럼(미네소타), 빌 포스터(일리노이), 드류 퍼거슨(조지아), 조디 애링턴(텍사스)

자료: 美 상무부 ITA Access 참고하여 저자 정리

□ 非알루미늄 제품과 함께 수입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 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예비 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지면서 잠정조치 시행 중

- 상무부가 美 관세청(CBP) 관계자 36인과 진행한 화상회의에서 관세청 관계자들은 조치 시행가능성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함('24.4.5.)
 - ▲결합 제품이 여러 국가에서 공급된 수많은 알루미늄 압출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추가 가공되어 더 이상 식별 가능한 부품으로 인식할 수 없는 부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조치 대상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집행 시 수입자의 주장을 입증할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
 - ▲하위 부품이 더 큰 제품에 통합되는지 여부, ▲하위 부품 내 압출 부품의 수량과 가치, ▲사용된 알루미늄의 유형(주조 혹은 압출) 등의 정보가 통관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특히 수입자가 무역업자나 중간상일 경우 해당 정보 입수에 우려를 제기
 -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와 반덤핑 조사는 각각 '24년 3월과 5월 상무부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지면서 잠정 관세를 부과 중
 - 앞서 '23.11월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 여부를 판단하는 USITC(美 국제무역위원회) 예비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짐
 - 한국은 '24.5월 반덤핑 예비판정에서 0.00~2.42%의 덤핑율을 적용받아 나머지 13개 조사대상국과 비교해 양호한 결과를 얻어냄
- * 국가별 잠정 덤핑율 : (한국)0.00~2.42% (중국)4.91% (콜롬비아)8.85~34.47% (에콰도르)17.23~51.20% (인도)3.44% (인도네시아)5.66~18.79% (이탈리아)0.00~15.30% (말레이시아)0.00~26.70% (멕시코)9.18~18.07% (대만)0.73~33.93% (태국)2.02~4.04% (튀르키예)10.11~19.86% (UAE)9.13~9.17% (베트남)2.85%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가 적용된 덤핑율은 제외)
- ** 도미니카 공화국은 수출물량이 미미하여 USITC 예비판정 시 조사 종료
- 향후 덤핑율과 상계관세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상무부 최종판정과 US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이 차례로 예정되어 있음

〈표4.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경과〉

반덤핑		상계관세	
일자	경과	일자	경과
'23.10.4.	반덤핑 청원: 15개국 대상	'23.10.4.	상계관세 청원: 4개국 대상
'23.10.24.	상무부 반덤핑 조사 개시	'23.10.24.	상무부 상계관세 조사 개시
'23.11.20.	US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긍정)	'23.11.20.	USITC 산업피해 예비판정 (긍정)
'23.12.1.	한국 의무답변자 선정	'23.12.6.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 연장 공고
'24.2.1.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연장 공고	'23.12.28. → '24.3.5.	상무부 상계관세 예비판정 (긍정)
'24.3.2. → 5.2.	상무부 반덤핑 예비판정 (긍정)		

자료: 美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참고하여 저자 정리

- 동 케이스는 최종판정이 대선 직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예비판정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반덤핑·상계관세 케이스는 조사개시부터 최종판정까지 통상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동 케이스도 10월 하순 경 최종판정이 내려질 전망
 - 대선 직전에 경합주의 표심을 결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동 케이스는 미국 철강노조가 제소자 중 하나여서 경합주 표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강 노동자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
- 최종판정 이후에도 조사대상 범위에 대한 조정 없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동 케이스가 선례로 남아 향후에 광범위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 청원이 추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4)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한국도 포함

- 미국의 우회수출 신규 조사 개시건수는 '22년 정점에 이른 후 다소 감소
 - '22년 26건의 조사가 개시되어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한 이후 '23년은 13건, '24년 상반기까지는 1건 개시
 - '22년 개시된 26건 중 5건은 조사가 종료 되었으며, 5건은 부정판정이 내려져, 16건에 대해 조치 시행 중
 - '23년 개시된 13건의 신규 우회조사 중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중국산 제품을 대상

〈표5. 대상 국가별 미국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6월
중 국	0	6	2	2	12	4	2	17	12	1
대 만	0	0	0	1	1	0	0	3	0	0
한 국	0	0	0	2	0	0	0	3	0	0
멕 시 코	0	0	0	1	1	0	0	0	1	0
인 도	0	0	0	0	0	0	0	3	0	0
그 외	0	4	0	0	3	0	0	0	0	0
총 계	0	10	2	6	17	4	2	26	13	1

자료: 美 상무부 ITA Access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참고하여 저자 정리

□ 최근 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한국이 지목되는 경우가 발생

- '제3국 조립·완성'의 유형으로 개시된 조사의 경우 우회수출 경유지로 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거론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22.7월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Aluminum Foil)' 우회조사에서 한국이 중국산 제품의 경유지로 지목된 이후로 동일한 유형으로 현재까지 총 3건의 조사가 개시되었음
 - '22.7월 '알루미늄 호일', '23.7월 '알루미늄 시트(Common Alloy Aluminum Sheet)', '23.10월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Aluminum Wire and Cable)' 등 모두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조사로, 이 중 두 건은 상무부 직권으로 조사가 개시되었음
- (알루미늄 호일) 상무부 직권으로 조사가 개시되었으며, 한국 내에서 '사소한 수준' 이상의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수출 긍정판정이 내려짐
 - * 미국의 우회조사는 '미국 내 조립·완성', '제3국 조립·완성', '사소한 변경', '추후 개발된 물품'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가장 빈번하게 개시되는 '제3국 조립·완성'은 부품 또는 요소를 제3국(경유지)에 수출한 뒤 사소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을 미국에 판매함으로써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는 유형으로 제3국(경유지) 내 공정의 사소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
 - (혐의)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에서 한국과 태국에 알루미늄 호일 및 시트를 수출한 뒤 이를 가공하여 미국에 알루미늄 호일을 수출
 - (경과) '22.7월 상무부 직권으로 우회조사가 개시되었으며, '23.3월과 11월에 내려진 예비 및 최종 판정에 따라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이 한국과 태국을 경유하는 것으로 결론
 - (결과)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미제출 시 중국산 알루미늄 호일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납부해야 함
- (알루미늄 시트) 중국 제조사의 한국 내 법인을 특정하여 개시된 점이 특징적이며, 제소자 요청으로 조사가 종료되었음
 - (혐의) 중국산 알루미늄 시트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의 '허난 밉타이(Henan Mingtai)' 또는 '정저우 밉타이(Zhengzhou Mingtai)'에서 생산한 평판 압연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중국 밉타이 그룹의 100% 출자사인 '광양 알루미늄(Gwangyang Aluminum)'이 한국에서 알루미늄 시트를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
 - (경과) '23.5월 미국 국내 생산자 청원으로 동년 7월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11월 제소자 요청 철회로 12월 조사 종료 처리

- (알루미늄 연선·케이블) 상무부 직권으로 범위조사(scope inquiry)와 함께 우회조사가 개시되었으며 예비판정에서 우회수출 긍정 판정이 내려짐

* 범위조사(scope inquiry)는 조사대상물품이 기존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

– (혐의) 중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의 투입물을 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가공 후 미국으로 수출

– (경과) '23.10월 조사가 개시된 이후 국내 생산자들은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주장하거나 해당 품목의 대미 수출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장했으나, 이와 별개로 '23.8월 예비판정에서 중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이 한국과 베트남을 우회하는 것으로 결론(캄보디아는 우회수출 부정판정)

* 국내 주요 수출업체 중 한 곳이 중국 화통케이블의 100% 자회사이며 화통케이블은 기존에 중국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화통케이블로부터 원재료를 조달받아 국내에서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을 생산한 경우 기존의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

– (결과)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 미제출 시 중국산 알루미늄 연선·케이블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예치해야 함

□ 알루미늄 호일 우회수출 조사에서 국내 업계가 적극적인 논리로 방어했음에도 상무부의 재량이 다수 작용하면서 긍정판정이 내려짐

- 국내 생산자는 한국 내 공정으로 인해 제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변화되었으며, 상무부도 해당 공정이 '제품을 상업적으로 사용가능한 상태로 생산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한국 내 공정이 중요하다고(사소하지 않다고) 주장
- 한국에서 생산하는 초박형 호일은 높은 수준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요구하며, 패키징, 2차전지, 전기제품, 건축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중국에서 조달한 알루미늄 스트립과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
- 상무부도 한국 내 공정의 투자와 연구개발 수준, 설비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충분한 논의 없이 생산공정 특성상 호일 생산이 중국 내 스트립 생산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림

□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 경유지로 판정이 내려질 경우 중국에 부과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이 한국의 대미 수출에 적용될 수 있어 주의 필요

- 한국에서 선적된 수출품의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 부과되지 않았던 관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

- 중국은 비시장경제로 분류되어 시장경제 국가에 부과되는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가 중국에 부과되고 있어, 우회수출 긍정판정으로 중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국내 수출 물량에 적용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음
 - 조사가 개시될 경우 국내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 대응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미국 로펌 등과의 계약이 필요한 만큼 여러 행정적, 비용적 부담이 늘어날 우려
 - 美 상무부 조사 과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비협조기업으로 간주되어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받을 위험이 있으며, AFA를 적용받을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제출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됨
- *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적절한 증빙을 제출하면 긍정판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미국으로 조사대상 품목 수출 시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음

3 전략경쟁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 강화

1. 무역법 301조¹⁸⁾에 근거한 전략산업 대중 관세인상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한 對中 301조 관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전기차·배터리, 태양광, 반도체 등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큰 폭으로 인상('24.5.14.)
 -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301조 관세 부과 후 4년이 경과함에 따라 무역법 307조에 따라 조치의 유효성, 자국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토 절차를 개시('22.5월)
 - 약 2년간의 검토 끝에 기존 관세조치는 연장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 반도체과학법 등 산업보조금 정책을 통해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전략 분야를 선별해 관세를 대폭 인상
 - －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 진영이 주장하는 전면적인 관세인상은 미국 내 일자리를 위협하고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 만큼 '전략 부문을 신중하게 공략(carefully targeted at strategic sectors)'했다고 밝힘

〈표6. 301조 관세인상 주요 품목별 미국의 대중국 수입 현황 및 상세 내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대중국 수입액	총 수입	대중국 의존도	기존 301조 관세율	인상 후 301조 관세율	적용 시점
철강·알루미늄		914	46,812	2.0%	0~7.5%	25%	2024
반도체		2,322	41,563	5.1%	25%	50%	2025
전 기 차	전기차	385	24,178	1.6%	25%	100%	2024
	전기차용 리튬이온배터리	2,287	3,515	70.4%	7.5%	25%	2024
	非전기차 리튬이온배터리	10,779	15,033	72%	7.5%	25%	2026
	배터리 부품	6	86	7.0%	7.5%	25%	2024
	천연흑연	110	157	70%	없음	25%	2026
	영구자석	435	543	80.1%	없음	25%	2026
	기타 광물	239	5,147	4.6%	없음	25%	2024
태양광 셀 (모듈 조립 여부 관계없음)		12	19,329	0.1%	25%	50%	2024
항만 크레인		47	113	41.6%	없음	25%	2024

자료: Rodium Group(2024), USTR(2024) 종합

- － 다만 자국 내 제조업 투자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미국 국내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에 대한 관세인상 예외 신청 절차를 시작했으며, 특히 특정 태양광 제조 장비에 대한 예외 신청¹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표

18) 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자국 기업이 청원을 제기하면 조사, 협의를 진행하고 원활하지 않을 시 대통령이 무역협정의 양허 정지, 관세인상 등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 바이든 행정부는 동 조치의 배경으로 중국의 기술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 관행과 이로 인한 생산 과잉 및 중국산 저가 수출품 급증 문제로부터 자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
 - 소비재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선택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예측을 뒤집고 모든 기존 301조 관세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인상
 - 대선을 앞두고 철강·자동차 등 경합주 주력산업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고, 이미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일 수 있음
- 대상 품목 대부분은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으며,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경우 미국 국내 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
- 대부분의 관세인상 품목은 기존 301조 및 232조 조치, 반덤핑·상계관세, IRA 세액공제 FEOC 배제 요건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이미 낮은 수준
 - 바이든 행정부는 동 조치 대상 품목의 '23년 대중국 수입액을 180억 달러로 추산했으며,²⁰⁾ 이는 동기간 미국의 총 상품 수입액 3조 841억 달러 대비 0.58%, 대중국 총 수입액 대비 4.21%에 불과²¹⁾
 - 특히 전기차는 100%, 반도체 및 태양광 셀은 50%로 다른 품목 대비 인상 후 관세율이 높으나, 각각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0.1%, 5.1%, 2.0%로 특히 낮은 편에 속해 동 조치가 수입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배터리 부품(battery parts)의 경우 '23년 대중국 수입액이 22.8억 달러에 달했던 비납축(non-lead-acid) 배터리 부품은 제외하고, 성숙(mature) 기술로서 동기간 대중국 수입액이 640만 달러에 그친 납축(lead-acid) 배터리 부품에만 적용²²⁾
 - 흑연, 영구자석을 제외한 기타 주요 광물(other critical minerals)도 HS코드 8자리 기준 26개 품목에만 적용해 갈륨, 게르마늄 등 대표적인 핵심광물은 제외²³⁾
 - 기타 주요 광물의 전체 대중국 의존도는 4.6%에 불과하나, 세부 품목 중 텅스텐(65%), 보크사이트(56%), 크롬(42%), 탄탈륨(34%) 등 일부는 대중국 수입 비중은 높은 편

19) 제한된 제외 사항은 실리콘 용광로, 적층기 및 태양광 웨이퍼의 리프팅, 핸들링, 적재 또는 하역을 위해 설계된 기계 또는 태양광 모듈 조립에 사용되는 특정 기계를 포함

20) The White House(2024.5.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21) K-Stat 참고

22) Reva Goujon and Charlie Vest(2024.5.15.), "US-China Trade War, Volume 2,," Rhodium Group.

23) Ibid.

□ 리튬이온 배터리는 대중국 수입액 및 수입 의존도가 모두 높으며, 천연흑연과 영구자석도 중국산 대체가 어려워 영향이 불가피

- 대상 품목의 '23년 대중국 수입액 중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중국 수입액이 72.6%를 차지하며, 동 품목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70.4%로 높게 나타남
 - 이 중 전기차용 배터리의 경우 IRA FEOC 요건의 영향으로 미국 시장 내 '23년 한국의 점유율이 42.4%, 일본 40.7%, 중국 16.9%이지만,²⁴⁾ 한국, 일본 기업들은 이미 미국 내 생산 체계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남
-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표적 품목인 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는 기존에는 IRA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동 조치로 인해 중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
- 천연흑연과 영구자석은 전략 품목에 필요한 핵심광물 중 가장 중국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내 공급 다변화가 어려워 관세인상 조치가 미국 내 자동차, 전자 등 다운스트림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중국의 천연흑연 채굴 비중은 전 세계 생산량의 80%, 음극재용 구형흑연으로의 가공 비중은 99%에 달하며, 다른 국가로의 공급 다변화 노력에도 중국의 구형흑연 공급 비중은 '30년 85%, '40년 80%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됨²⁵⁾
 - 미국 재무부는 흑연에 대한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에 따른 엄격한 조달 제한 요건 적용을 2년 연장 조치한 바 있음
- 흑연, 희토류에 대해 중국이 수출통제를 시행하는 등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추가 제재를 통해 전략산업 내 기업들의 공급선 다변화를 촉진하고 공급망 취약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시행 시기) 산업별 수입선 대체 등 조정이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천연 흑연 및 영구자석은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고려해 관세 시행을 2년 연기

24) 황경인(2024.5.31.),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KIET 산업포커스

25) IEA(2024),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4”.

□ USTR은 관세 인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세부 대상 품목, 관세율, 면제 범위 등을 확정할 예정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동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5.14.~6.28.)를 거쳐 관세 조치 시행에 나설 예정('24.9월 중)이며, '25년, '26년 예정된 인상 조치는 해당 연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

〈표7. 301조 관세 인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관세 추가 인상 및 면제 절차 축소 요청		조치 비판 및 축소, 시행 연기 요청	
미국철강협회 (AISI)	제3국 가공 중국산 철강에도 301조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301조 대상 철강 제품 원산지 결정 시 제강(melt and pour) 국가를 고려해야 함 ²⁶⁾	미 경영자단체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등 中 공급과잉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정책 수단 존재 - 中 기술이전 요구,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301조 조치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했음을 비판²⁷⁾
미국알루미늄협회(AA)	중국산 알루미늄이 사용된 제3국산 알루미늄 집약 제품(aluminum-intensive products)에 대해서도 301조 관세 확대 적용해야 함 ²⁸⁾	미국자동차정책협의회 (AAPC, 미 완성차업체 대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산 흑연에 대한 관세조치 시행을 '27년까지 연기할 것을 요청 - 영구자석에 대해서도 '22년 상무부가 232조 조사 보고서에서 관세 조치를 배제한 바 있음을 고려해야 함²⁹⁾
전미자동차노조 (UAW)	농업, 광업, 건설 기계류에 대한 관세 면제 절차에 문제 제기	자동차 및 장비 제조협회 (MEMA, 자동차 부품업계 대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관세인상이 IRA에 따른 미 국내 전기차 공급망 구축 노력을 둔화시킬 수 있음 - 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최소 4~5년 소요되며, 차량용 반도체 공급 제한적³⁰⁾
미국철강노조 (USW)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관세율을 제안된 25%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제안 ³¹⁾		

26) Oliver Ward(2024.7.3.), "Steel and aluminum industry to USTR: Use 301 tariffs to address diverted Chinese exports," Inside US Trade.

27) Oliver Ward(2024.7.1.), "Labor groups urge USTR to expand Section 301 tariff hikes to protect U.S. jobs," Inside US Trade.

28) Oliver Ward(2024.7.3.), op.cit.

29) AAPC(2024.6.29.), "AAPC Response to Request for Comments on Tariff Rate Modifications and Other Actions Proposed by USTR for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

30) Doug Palmer(2024.6.28.), "Companies press Biden to reconsider China tariff hikes," Politico Pro.

31) Ibid. 미국 상무부는 중국, 한국, 대만 등 8개국산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24.1월 최종 판정에서 중국 전체 기업(China-Wide Entity)에 대해 122.52%의 덤핑 마진을 책정하였으나, '24.2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으로 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료된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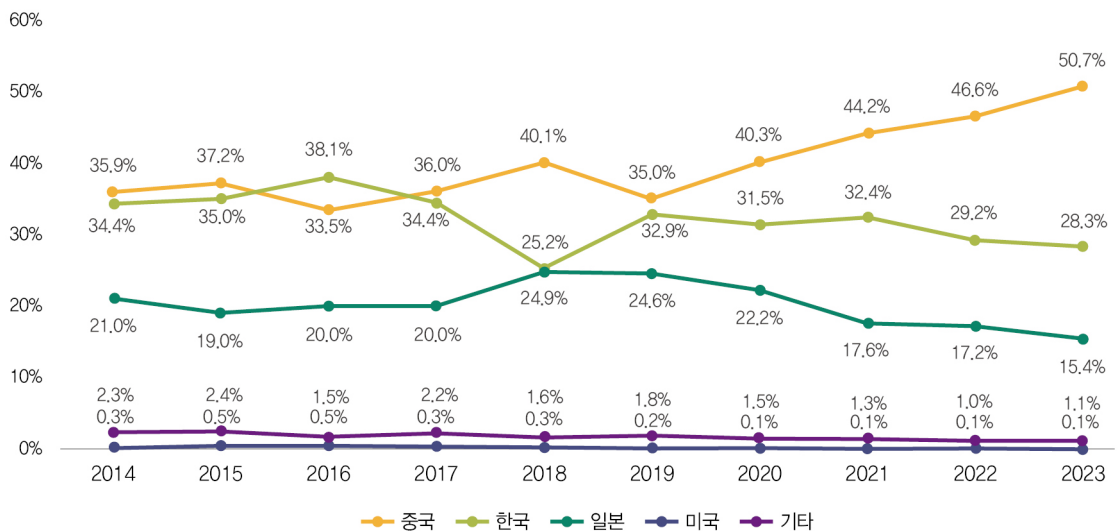
2. 주요 산업별 보호조치

(1) 조선 : 301조 조사 개시 및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료 부과 방안 검토

□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조선·해운 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24.4.17.)

- '23년 기준 중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은 전 세계 생산량 대비 50.7%, 수주 점유율은 59%에 달하나³²⁾ 미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은 0.1%에 불과

〈그림4.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별 선박 건조 점유율 추이〉



자료: UNCTAD

- 전미철강노조(USW) 등 美 5대 노조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 조선업 몰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중국 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사 청원을 제기('24.3월)
 - 통상법 302조에 의거하여 USTR은 미 국내 업계 청원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조사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전미철강노조(USW) 본부에서 진행한 유세 연설에서 중국 조선·해운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개시를 지시하고³³⁾, 같은 날 USTR이 조사 개시를 발표³⁴⁾

32) SteelOrbis(2024.1.3.), "China claims 59% of new shipbuilding orders in global market in 2023".

<https://www.steelorbis.com/steel-news/latest-news/china-claims-59-of-new-shipbuilding-orders-in-global-market-in-2023-1321647.htm> (2024.7.10. 방문)

33) The White House(2024.4.17.), op.cit.

- 중국 조선업의 부상 이전에도 미국 조선업의 경쟁력은 이미 약화된 상황이었으며, 오히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존스법(Jones Act)’이 경쟁력 저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중국 정부는 제11차 5개년 경제계획(’06~’10년)에서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이후 ’13년까지 약 962억 달러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해³⁵⁾ 점유율을 ’05년 12.6%³⁶⁾에서 ’14년 35.9%로 높임
 - 미국은 1970년대에도 이미 연간 신규 상선 생산량이 15~25척으로 생산 비중이 전 세계 생산량 대비 5% 미만(톤수 기준)이었으며, 1981년 건조 차등 보조금 폐지 이후에는 1% 수준으로 급감³⁷⁾
 - 미국 내 연안해운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 자국 내 건조 요건을 의무화한 1920년 존스법으로 인해 미국 조선 업계가 경쟁 없이 자동 배정되는 내수 물량에 의존해 경쟁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³⁸⁾
 - ’23년 중국의 선박 건조 점유율은 ’19년 대비 15.7%p 증가한 반면, 동 기간 한국의 점유율은 4.6%p, 일본은 9.5%p 감소하는 등 중국과의 경합에서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는 상황
- 대선 전 301조 조사 결과에 따른 보복조치 발표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의 영향은 크지 않으나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료 부과 등의 조치가 시행될 경우 상당한 영향 발생 전망
 - 301조 조사 및 당사국과의 양자협상 기간은 12개월로 규정되어 있으나, 미 대선(’24.11월) 전에 조사 결과와 보복조치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트럼프 전 행정부도 301조 조사 개시(’17.8월)로부터 7개월 만에 조사 결과 및 보복관세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18.3월)한 바 있음
 - 보복조치로서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국제 해운시장 내 미국의 비중이 낮고, 미국 선사가 중국 조선소에서 구입하는 선박 물량이 연간 10척 미만으로 영향이 크지 않음³⁹⁾
 - 미 대통령은 관세 외에 광범위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며,⁴⁰⁾ 청원자는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중국산 선박에 대해서는 선주에 상관없이 컨테이너 당 50달러 수준의 항만 이용 수수료 부과를 요구

34)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Targeting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for Dominance, 89 Fed. Reg. 29424 (2024.4.22.)

35) 이후권(2021.8.20.), “CATO : 중국을 통해 바라본 산업정책의 잠재적 우려사항,” 워싱턴 통상정보.

36) 정승호(2006.8.29), “중국 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 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3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11.15.), “U.S. Commercial Shipbuilding in a Global Context”.

38) Colin Grabow, Inu Manak, and Daniel J. Ikenson(2018.6.28.), “The Jones Act: A Burden America Can No Longer Bear,”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39) 繆琦(2024.4.19.), “美国对华发起新301调查, 对中国造船业影响有多少?,” 第一财经.

40) 301조가 발동된 산업과 관계없는 다른 모든 산업 분야에도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적용 범위가 매우 넓음

-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료 부과 방안에 대해 EU와 이해관계자들은 우려를 표명
 - EU는 미국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무역상대국에 차별적이거나 의도치 않은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으며, 노르웨이 정부도 조치의 영향이 국제 선주 및 운항선사에 집중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힘⁴¹⁾
 - 유럽선주협회(The European Community Shipowners' Associations, ECSA)는 전 세계 상업용 선단의 35%가 비중국 선사가 운영하는 중국산 선박으로 구성되어, 항만료 부과 조치 시행 시 파급 범위가 크다고 주장⁴²⁾

(2) 철강·알루미늄 : 멕시코 우회 대응 232조 관세 면제 요건 강화

- 바이든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멕시코산 철강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24.7.10. 즉시 발효)
 - 동 조치를 통해 미국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철강 중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제강(melt and pour)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
 - 알루미늄의 경우 1·2차 제련국(primary and secondary country of smelt)이나 마지막 주조국(country of most recent cast)이 중국, 이란, 벨라루스인 경우 10%, 러시아인 경우 200%의 관세를 부과
 - 미국은 멕시코·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조치를 철회하기로 양국과 합의('19.5.7.)했으나, 수입이 과거 교역량 이상으로 급증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실패할 경우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음
 -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생산된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이 멕시코 내 추가 가공이나 환적을 통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참고3. 중국산 철강의 멕시코 경유 우회수출 현황〉

- 미국 상무부의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Steel Import Monitoring and Analysis System, SIMA)에 따르면 '22.1월~'24.6월 미국에 유입된 중국산 제강(melt and pour) 철강 제품은 약 1.7 메트릭톤에 달하며 이 중 17%는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추가 가공을 거친 제품⁴³⁾
 - 현행법상 제강 원산지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아도 패널티가 부과되지 않아 실제 중국산 제강 철강 제품의 수입량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⁴⁴⁾
- ADB MIRO(다지역산업연관모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대멕시코 수출 중 최종적으로 미국에 수출된 금액은 '17년 66억 달러에서 '22년 10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철강 제조업의 멕시코 경유 대미 우회수출은 '17년 2.86억 달러에서 '22년 9.76억 달러로 241.3% 증가⁴⁵⁾

41) Doug Palmer(2024.5.22.), "International shipowners to Biden: Don't slap port fee on Chinese-made ships," Politico Pro.

42) Ibid.

- 미국이 '23년 수입한 멕시코산 철강 약 380만 톤 중 북미가 아닌 제3국에서 제강된 제품은 약 13%에 달하며, 수입된 멕시코산 알루미늄 약 10.5만 톤 중 약 6%가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이란에서 제련됨⁴⁶⁾
 - 기존과 같이 멕시코산 철강 및 철강 파생제품⁴⁷⁾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업체가 철강의 제강 국가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美 관세국경보호청(CBP)에 제출하여 북미 제강 사실을 입증해야 함
 - 멕시코산 알루미늄⁴⁸⁾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분석증명서(a certificate of analysis)를 통해 1·2차 제련국이나 마지막 주조국이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이란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
- 최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의 멕시코 경유 대미 수출이 증가하자 미국은 멕시코에 대해 232조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며 압력을 가했으며, 멕시코는 FTA 비체결국에 대한 관세인상 조치 등으로 대응
- 미국은 중국 등 제3국이 232조 관세 면제 특혜를 위해 멕시코를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 수출 급증 문제 해결을 촉구
 -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협의를 통해 수출 급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19년 양국간 합의에 근거해 232조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음을 강조('24.2.16.)했으며,⁴⁹⁾ 미 상원은 멕시코산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 재부과 법안을 발의('24.3.12.)⁵⁰⁾
 - 멕시코 정부는 232조 관세 재부과를 피하기 위해 FTA 비체결국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총 54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35%까지 인상('24.4.22.)했으며, 철강 수입 통관 시 제강 장소 등을 명기한 원산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24.4.15.)⁵¹⁾
 - 관세 인상조치는 중국뿐 아니라 모든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산 제품도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강관 등 멕시코 산업진흥프로그램(PROSEC)⁵²⁾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품목은 직접적 영향

43) Oliver Ward(2024.7.3.), "Steel and aluminum industry to USTR: Use 301 tariffs to address diverted Chinese exports," Inside US Trade.

44) Ibid.

45) 김나을(2024),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Vol.19.

46) Margaret Spiegelman(2024.7.10.), "U.S., Mexico announce joint actions to counter steel, aluminum transshipment," Inside US Trade.

47) 적용되는 철강제품은 포고문 9705(2018) 제1항, 철강 파생제품은 포고문 9980(2020) 부속서 II 참고

48) 적용되는 알루미늄 제품은 포고문 9704 제1항 참고

49) Margaret Spiegelman(2024.2.22.), "U.S. adds rebar to monitoring list in developing steel deal with Mexico," Inside US Trade.

50) S.3917 - Stop Mexico's Steel Surge Act, 118th Congress (2023-2024)

51) Margaret Spiegelman(2024.4.29.), "USTR official: U.S. assessing Mexico's new tariffs as steel talks continue," Inside US Trade.

52) PROSEC(Programas de Promoción Sectorial) : 전기·전자, 자동차 등 특정 산업에 대해 국내 생산공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소재·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최종산출물의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0~5% 사이의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 관세 우회 방지 및 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원산지 요건이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행정적 부담 증가 등 영향이 불가피
 - 기존 미 상무부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의 제3국 우회나 환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제강, 제련 및 주조 국가를 보고하도록 했으며, 추가로 CBP가 이를 통관 개요서(Form 7501) 상의 필수 정보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⁵³⁾
 - 미국철강협회(AISI)는 제3국에서 가공된 중국산 철강에도 301조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301조 대상 철강 제품의 원산지 결정 시에도 제강 국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⁵⁴⁾
 - USMCA의 경우에도 발효 7년 후('27.7.1.)부터는 하나 이상의 USMCA 당사국에서 제강한 철강 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동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일부 철강 제품을 멕시코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영향이 불가피하며, 제강·제련 국가를 입증하기 위한 분석증명서 제출 등 행정적 부담도 증가

(3) 자동차 : 커넥티드 차량 국가안보 규제

-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기술·부품을 겨냥해, 적성국 기업과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이하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입법 예고('24.3.1.)⁵⁵⁾
 - 동 규칙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망 안보(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에 관한 행정명령('19.5.15.)에 근거
 - 동 행정명령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ICTS 거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위험 완화조치를 부과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게 부여⁵⁶⁾
 - 적성국이 소유, 통제하거나 해당국의 관할 또는 지시 하에 있는 기업과는 커넥티드카 관련 필수 ICTS 거래를 금지하고자 하는데, 적성국으로 지정된 6개국 중 해당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 뿐

53)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4.4.19.), "Entry Summary (Form 7501)," 88 Fed. Reg. 24203.

54) Oliver Ward(2024.7.3.), "Steel and aluminum industry to USTR: Use 301 tariffs to address diverted Chinese exports," Inside US Trade.

55)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2024.3.1.),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Connected Vehicles," 89 Fed. Reg. 15066.

56) 커넥티드카는 운전자·탑승자 행동, 지리적 위치, 생체 인식 데이터 등을 수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력·통신·교통 등 미국 중요 인프라 시스템에 접근하여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

- 특히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국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기업을 동원(co-opt)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중국 당국에 부여하는 만큼 입법 관련 조사가 중국에 집중된다는 점을 밝힘
 - 중국 내 영업 중인 200개 이상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지리적 위치 정보를 포함한 실시간 차량 데이터를 중국 정부 모니터링 센터에 전송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오픈소스 보고 내용을 인용

□ 동 규정은 완성차 뿐 아니라 커넥티드 차량에 사용되는 다수의 부품과 기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 제3국산 차량까지도 규제 가능

- 동 규정 제안은 기본적인 통신 기능을 갖춘 차량까지도 모두 커넥티드 차량에 해당한다고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사실상 모든 차량에 적용 가능하며, 완성차 뿐 아니라 다수의 부품과 기술에 적용
 - 센서, 마이크로컨트롤러, 소프트웨어, 무선통신 모듈, 배터리 시스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⁵⁷⁾

〈표8. 커넥티드 차량 ICTS 규정안 주요 내용〉

구분	내 용
ICTS	전송, 저장, 디스플레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데이터 처리, 저장, 검색 또는 통신의 기능을 주로 수행하거나 가능하게 하는(enable)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타 제품 또는 서비스
ICTS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ICTS의 취득(acquisition), 수입(importation), 이전(transfer), 설치(installation), 거래(dealing in) 또는 사용(use)• 관리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수리, 고객 다운로드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플랫폼 제공 또는 데이터 호스팅 등 지속적인 활동 포함• 행정명령의 적용을 회피, 우회하기 위해 설계되거나 의도된 다른 모든 거래 포함
커넥티드 차량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근거리·셀룰러·위성 통신 또는 기타 무선 연결을 통해 다른 네트워크 또는 장치와 통신하는 차량• 개인용, 상업용 차량에 관계 없이 △위성항법시스템(GNSS) 통신, △지능형 교통 시스템과의 통신, △원격 제어, △무선 소프트웨어 또는 펌웨어 업데이트, △온디바이스 긴급출동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차량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해외 적성국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사전입법예고에 언급된 규제 가능성 높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자동운전시스템(ADS)• 셀룰러·위성 통신 등 무선통신 기술• 시선 추적, 안면인식 등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DMS)•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연결 텔레매틱스(Telematics) 시스템• 레이더(radar), 라이다(LiDAR), 울트라소닉, 오디오, 비디오 센서•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자료: 美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참고하여 저자 작성

57) Reva Goujon(2024.3.5.), "Shut Out: Data Security and Cybersecurity Converge in Next Wave of US Tech Controls," Rhodium Group.

- 멕시코 등 제3국산 차량에 사용된 중국산 부품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제3국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부품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
 - 러먼도 장관은 동 규정으로 중국 기업이 멕시코 등 제3국에서 제조하는 전기차의 미국 내 유입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24.5.15.)
- 연내 발표되는 최종 규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 대상을 실질적 국가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부품·기술로 제한할 가능성
 - 미국 국내외 자동차 제조업체와 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은 제안된 규정의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보다 표적화된 접근법을 촉구
 - 미국 국내외 자동차 업계는 적성국에서 제조된 모든 ICT 부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평가된 위험 수준이 실재하고(tangible), 상당한(considerable) 품목에 집중할 것을 요구⁵⁸⁾
 - 예컨대, 미국자동차부품협회는 사전 입법예고에 언급된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ADAS) 중에서도 자동긴급제동(AEB) 또는 차선유지지원(LKA) 등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아 국가안보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 금지된 거래에 대해서도 국가안보 위협이 제한적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음⁵⁹⁾
 - 추후 거래금지 조치가 본격화되면 이는 ICTS 규정에 따라 취하는 첫 거래금지 조치로, 실제 시행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와 거래, 협력, 투자 시 부담이 증가할 것
 - 향후 ICTS 거래 제한이 바이오 제조, 자율 또는 무인 시스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전자상거래, 클라우드 기반 컴퓨팅 및 스토리지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⁶⁰⁾

58) Doug Palmer(2024.6.10.), "Commerce's 'connected vehicle' probe triggers fear at home and abroad," Politico Pro.

59) BIS는 사전 입법예고에서 이러한 절차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함

60) Reva Goujon(2024.3.5.), "Shut Out: Data Security and Cybersecurity Converge in Next Wave of US Tech Controls," Rhodium Gro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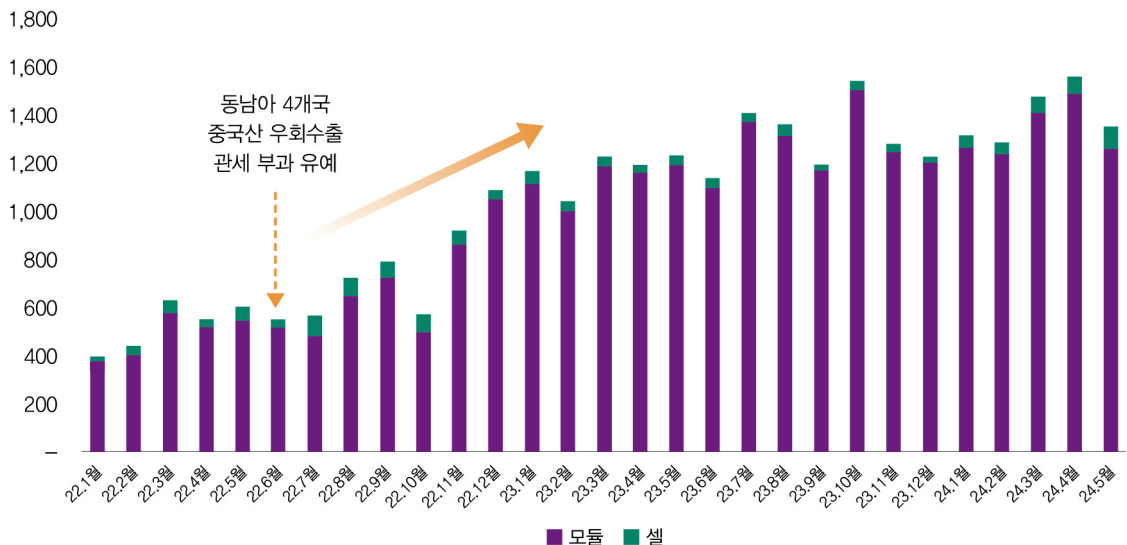
(4) 태양광 :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강화

□ 동남아 4개국産 패널에 대한 2년간의 관세 유예기간 동남아산 태양광 패널 수입이 급증했으며, IRA 첨단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태양광 제조는 대부분 패널 조립 공정에 국한

- 중국산 우회수출 공정판정에도 동남아 4개국産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관세가 2년간 유예되자 해당 기간 미국의 동남아산 패널 수입 및 재고량이 급증
 - － 관세 유예 조치가 시행된 '22.6월 이후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재고량이 증가해 '23년말 기준 45GW 이상, '24.5월 기준 100GW 이상의 패널 재고가 축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⁶¹⁾
 - － 관세와 IRA 보조금을 고려해도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한 동남아산 수입품 급증 및 미국 내 높은 제조비용으로 인해 115GW 상당의 태양광 제조 계획 위기⁶²⁾
- 미국산 셀을 사용한 패널에 대한 IRA 구매 세액공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양광 제조 투자는 대부분 셀 생산보다는 태양광 패널 조립에 집중

〈그림5. 미국의 동남아 4개국産 태양광 셀·모듈 수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TC Trademap

61) John Fitzgerald Weaver(2024.5.16.), "Bifacial solar module tariffs reinstated," PV Magazine.

62) Amanda Chu and Demetri Sevastopulo(2024.3.13.), "US solar manufacturers in 'dire situation' as imports soar," Financial Times.

– 태양광 셀은 공장 건설 소요기간이 길고 이윤율은 낮으며, 아시아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가 빨라 미국 내 제조가 어려운 상황으로, '24년 말까지 미국 내 태양광 셀 제조 능력은 5GW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되어 연간 예측 수요량인 38GW에 미치지 못함⁶³⁾

– IRA 이후 발표된 태양광 셀 제조 투자 계획 27.3GW 중 8.3GW 수준만 실현 가능(BNEF)⁶⁴⁾

□ 미국 정부는 국내 제조업체의 청원을 수용하여 동남아 4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신규 개시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를 잇따라 강화

○ 미국 내 태양광 발전 보급 차질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지 제조업체의 청원을 수용하여 동남아 4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의심되는 중국 태양광 제조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개시('24.5.15.)

– 동 조사는 퍼스트솔라 등 미 국내 제조업체 7개사의 청원으로 개시되었으며, 청원인들은 대중국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동남아로 생산거점을 옮긴 중국 기업들이 중국 정부 보조금을 토대로 덤핑을 한다고 주장

– 미국청정전력협회(ACP),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 미국 재생에너지협의회 등 산업 단체들은 동 조사가 미국의 태양광 제조산업 육성 및 탈탄소화 계획에 위협이 되고 반경쟁적이라며 청원에 반대⁶⁵⁾

○ 조사 대상 국가 내 80억 달러 규모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론지솔라, 트리나솔라 등 중국 주요 태양광 제조사들은 현지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량을 조정하는 등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⁶⁶⁾

〈표9.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주요 제재 현황〉

구분	시행시기	대상국가	대상 품목	세부 내용	현황
반덤핑·상계관세 (중국産)	'12.12월~	중국	셀, 모듈	최근 재심 최종판정(각각 '24.7월, '24.6월) 결과 : – (반덤핑) 범국가(China-wide) 관세율 238.95% – (상계관세) 개별율 최대 29.55%, 기타율 15.24%	
201조 세이프가드 관세	'18.2월~	모든 국가 (일부 신흥국 제외)	셀, 모듈	저울관세할당(TRQ) 방식 (관세할당량 5GW, 관세 14.25%)	양면형 패널 면제 조치 폐지 ('24.5.16.)
301조 관세	'18.8월~	중국	웨이퍼, 셀, 모듈	25% 관세 부과	관세율 50%로 인상 예정 ('24.8.1.)
우회덤핑 관세 (동남아産)	'24.6월~	동남아 4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셀, 모듈	개별율 없을 경우 각각 238.95%, 15.24%	24개월간 한시적 관세 면제조치 종료('24.6.6.)
반덤핑·상계관세 (동남아産)	조사중		셀, 모듈	– 중국 관련 제조사 타깃 – 청원인 70~271% 관세 요구	조사 개시('24.5.15.), ITC 긍정판정('24.6.7.)

자료: 저자 작성

63) Amanda Chu(2024.5.23.), "The trade dispute dividing the US solar sector," Financial Times.

64) Ibid.

65) Ibid.

66) Frank Chen and Ke Hanyan(2024.6.8.), "Chinese solar panel makers face dilemma as US plugs trade loophole in Southeast Asia," South China Morning Post.

- 양면형 패널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허용했던⁶⁷⁾ 세이프가드 관세⁶⁸⁾ 면제 조치도 폐지('24.5.16.)
 -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이프가드 관세인상 및 양면형 패널 면제 철회 결정에 대해 미 국제무역법원(CIT)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무효화 하였으나('21.11.16.),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23.11.13.)
 - 다만 국내 태양광 셀 생산능력 부족을 고려해 수입 태양광 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량을 7.5GW로 상향했으며,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 조치는 최대 8년간 운영할 수 있어 '26년 종료될 예정('26.2.6.)

67)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관세를 인상하고 양면형 패널 면제를 철회하고자 하였으나 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21.11.16.)을 내려 무효화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을 파기환송('23.11.13.)

68) 관세율 단계적 인하 : ('22.2월) 14.75% → ('23.2월) 14.5% → ('24.2월) 14.25% → ('25.2월) 14%

4 영향 및 대응

- 보호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고 중국의 제3국 경유 우회수출에 대한 규제가 확대되고 있어 단기적으로 중국산 대체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품목도 일부 존재
 - USTR 보고서에 따르면 '18년 대중국 301조 관세 부과 이후 미국의 수입처가 다변화되면서 멕시코 등 제3국이 중국을 대체했으며,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 수입이 증가한 바 있음
 -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및 부품 수입이 '17~'21년 연평균 205억 달러씩 감소한 가운데 다른 국가가 감소분을 대체했으며, 특히 한국산 수입이 동기간 연평균 19억 달러씩 증가⁶⁹⁾

〈표10. 미국의 국가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입 전년대비 변화 추이〉

(단위: 십억 달러)

품목	국가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가분
반도체 및 부품	중국	-4.6	-21.0	-27.6	-28.8	-20.5
	말레이시아	0.9	4.1	5.0	5.2	3.8
	대만	0.4	2.1	2.7	3.5	2.2
	한국	0.4	1.7	2.6	2.8	1.9
	기타	1.5	6.6	8.5	9.4	6.5
배터리, 광섬유케이블 등 기타 전자장비 및 부품	중국	-1.6	-6.9	-8.7	-10.6	-7.0
	멕시코	0.3	1.2	1.3	1.7	1.2
	한국	0.1	0.3	0.5	0.7	0.4
	일본	0.1	0.4	0.4	0.6	0.4
	기타	0.4	2.2	3.2	3.8	2.4

자료: USTR(2024)

- 대중국 301조 관세인상 품목 대부분은 기존 301조 관세나 반덤핑·상계관세 등으로 인해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이미 낮아 영향이 미미하나, 규제 수준이 낮았던 품목은 중국산 수입 비중이 감소할 수 있음
 - 예컨대, ESS용 배터리는 기존 301조 관세가 7.5%에 불과하고 IRA FEOC 규정에서 자유로웠으나 최근 25%로의 관세인상으로 삼원계 배터리와 LFP 배터리 간 가격 차(약 27%로 추산⁷⁰⁾)가 상쇄될 수 있음
- 중국의 제3국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확대는 미국 수입시장 뿐 아니라 역외 기업에까지 영향
 - 커넥티드카에 대한 ICTS 규정은 제3국에서 자동차를 제조하는 외국 기업까지도 중국 부품·기술기업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 가능

69)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4.5.1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70) '24.2분기 양국재 평균 판가에 기반한 미드니켈 삼원계 셀 가격은 LFP 셀 대비 27%가 높음. 참고: 장정훈, 서지현(2024.7.10.), "시대19 - ESS가 EV 캐즘을 극복할 상인가," 삼성증권.

- 중국산 선박에 대해 301조 관세 뿐 아니라 항만세를 도입될 경우 글로벌 해운시장에서 선복량 점유율이 높은 유럽 선사들⁷¹⁾까지 영향을 받아 비(非)중국산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중국을 타깃으로 한 보호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상존

- 한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된 232조 조치와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의 AFA, PMS 활용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국가 중 하나
 - 232조에 따른 쿼터제(쿼터량 263만 톤)⁷²⁾로 인해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량은 '15~'17년 연평균 375.7만 톤에서 '21~'23년 248만 톤으로 34% 감소⁷³⁾
 - 트럼프 행정부 당시('17~'20년) 상무부가 PMS의 존재 여부를 검토한 반덤핑 조사·재심 총 56건 가운데 한국은 23건(41.1%), 최종적으로 PMS를 적용한 총 27건 중 한국은 17건(68.0%)을 차지⁷⁴⁾
 - 한국은 중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하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 경쟁에 놓여있는 제품이 많으며, 대중국 수입규제로 중국산 수입이 감소하는 경우 한국이 이를 대체해 새로운 수입규제 대상이 되었기 때문⁷⁵⁾
- 최근 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법제 강화 및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 확대로 인해 우리 기업이 비시장 경제에 부과되는 높은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적용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
 - 특히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PMS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이 명문화되어 적용이 용이해졌으며, 정상가치 계산에 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 중국산에 대한 관세나 국가안보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원료나 중간재의 수입처를 대체할 경우 조달비용 증가에 따른 수출경쟁력 저하 등 발생 가능
 - USITC는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국산 전기차 부품의 수출 감소, 중국시장 내 가격 하락으로 오히려 중국산 전기차 수출가격이 0.06% 하락하고 생산량이 1.2% 증가하는 반면,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가격은 3.6% 상승, 생산량은 4.1% 감소할 것으로 분석⁷⁶⁾
- 미국 현지 투자 기업도 원재료나 중간재에 부과되는 관세인상으로 투입비용이 증가하는 등 부담 증가
 - '18년 부과된 301조, 232조, 201조 관세가 총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17.6%에 달할 정도로 다운스트림 업계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남⁷⁷⁾

71) Alphaliner에 따르면 전 세계 1~3위 선사인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스위스), Maersk(덴마크), CMA CGM Group(프랑스)의 선복량 점유율 합계는 47.0%에 달함('24.7.23. 기준)

72) EU, 일본, 영국은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쿼터 연 3%씩 조정, 분기별 미소진분 이월 가능, 쿼터를 초과해도 관세 25% 부과 조건으로 물량 제한 없이 수출 허용 등 조치를 완화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개선 협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73) 美 상무부 '철강 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SIMA)'

74) 김경화(2022), op.cit.

75) 박원(2024.6.13.),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규제 방향 예측," 한국경제 CFO Insight.

76) David Coffin et al(2024.5.), "The impact of Changes in Trade Policies on the Electric Vehicle (EV) Sector - a CGE Analysis," USITC.

〈표11. 총 생산 비용 중 301·232·201조 관세 비중 상위 10개 제조산업〉

순위	산업	비중	순위	산업	비중
1	알루미늄 시트/플레이트/호일 및 압연/인발/압출	17.6%	6	2차 알루미늄 생산(합금·제련)	7.1%
2	철강제품(철강 구매 후 가공)	8.4%	7	건축 및 구조용 금속	5.3%
3	보일러, 탱크, 운송용 컨테이너	8.3%	8	기타 운송장비	5.0%
4	단조 및 스탬핑	7.4%	9	기타 일반기계류	4.5%
5	1차 알루미늄 생산	7.2%	10	가전	4.4%

자료: Aaron Flaaen and Justin Pierce(2019)

- 실제 '18년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로 보호받는 산업의 미국 내 생산량은 '18~'21년 28억 달러 상당 증가했으나, 다운스트림 업계는 투입비용 증가로 인해 동기간 생산량이 34억 달러 상당 감소⁷⁸⁾

□ 11월 대선 결과도 중요한 변수

-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60%의 관세 뿐 아니라 동맹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한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및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⁷⁹⁾ 적용을 공약
 -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은 '23년 기준 미국의 8대 무역수지 적자국
-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기업 뿐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기업도 국내에서 원부자재, 중간재를 조달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인상에 따른 영향이 불가피
 - 미국 내 현지법인의 전체 매입 중 한국으로부터 조달하는 비중은 '22년 기준 61.4%로 현지 조달 비중(31.2%)의 약 2배⁸⁰⁾

□ 중국 기업들은 미국이나 제3국 내 생산시설 설립, 현지 기업과의 합작투자 등을 통해 보호조치 우회 시도를 지속할 것

-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중국 기업들의 제3국 내 생산시설 투자가 증가하여, '24.1분기 중국의 2,430억 위안으로 '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에 근접⁸¹⁾
 - 특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중국의 제조업 투자는 '23년 260억 달러로 전년비(54억 달러) 약 4배 수준⁸²⁾

77) Flaaen, Aaron, and Justin Pierce(2019.12.23.),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the 2018–2019 Tariffs on a Globally Connected U.S. Manufacturing Sector,"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86.

78) Peter Herman et al(2024.6.14.), "Economic Impact of Section 232 and 301 Tariffs on U.S. Industries," US ITC.

79) 교역상대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미국이 상대국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보다 높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관세를 부과

80) 도원빈(2024.5.20.),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효과,"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Brief Vol.6.

81) Bloomberg News(2024.4.26.), "Chinese Firms Are Investing Abroad at Fastest Pace in Eight Years".

- 미국은 IRA 세액공제 요건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중국 기업의 수혜를 배제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
 - '25년 기준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능력은 연간 20GW 규모로 전체 미국 생산능력의 절반에 이를 예정⁸³⁾
 -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미 하원 세입위, 중국특위 조사 등 정치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테슬라와도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 중
 -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차단하고자 할 수 있으나 현재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IFUS)는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관할권이 없음⁸⁴⁾
 -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유세와 전당대회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내 공장 건립에 개방적이라고 밝혀 리더십이 교체되는 경우 중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은 오히려 더 가속화될 수 있음⁸⁵⁾
-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산 제품의 제3국 선회로 인한 현지 수출경쟁 심화, 보호조치 확산 및 국내시장 내 수익성 악화에 대비할 필요
- 미국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만큼 중국의 제3국에 대한 저가 수출이 증가해 제3국 시장 내 한-중 간 수출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 중국의 '24.1~6월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감소한 반면, 동기간 카자흐스탄(26.2%), 브라질(23.4%), 베트남(15.5%), 이라크(13.1%) 등으로의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
 - '24.1~4월 중국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2% 하락한 반면, 동기간 수출물량은 8.7% 증가⁸⁶⁾
 - 중국산 저가 수입품의 자국 시장 잠식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무역장벽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고 있으며, 멕시코 관세조치의 경우 중국을 비롯한 모든 FTA 비체결국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업계에도 영향

82) Ibid.

83) Nichola Groom(2024.7.18.), "Many US solar factories are lagging. Except those China owns," Reuters.

84) 미국 재무부는 민감한 군사시설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심사할 수 있도록 CIFUS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토지에서 이루어질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심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음. Sarah Bauerle Danzman(2024.7.24.), "China's ability to buy US land near military bases just got more restricted," Atlantic Council.

85) Bloomberg News(2024.7.19.), "Trump Welcomes China to Build Cars in US in Departure From Biden".

86) 도원빈(2024.7.23.), "중국 저가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Brief Vol.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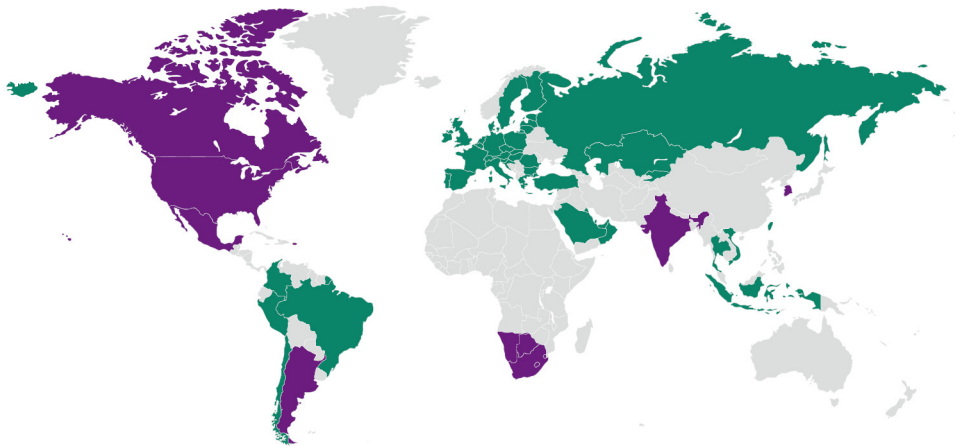
〈표12. 미국 외 제3국 대중국 보호조치 주요 현황〉

국가	시행일자	품목	세부 내용
멕시코	'24.4.22.	철강, 화학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알루미늄, 섬유, 플라스틱, 화학 등 총 544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상 - 중국, 한국, 인도 등 모든 FTA 비체결국 대상
칠레	'24.4.19.	철강	철강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33.5%, 24.9%의 임시 반덤핑 관세 부과
브라질	'24.6.1.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11개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제 실시 · 쿼터 내 9.0~12.6% 관세, 쿼터 초과 물량 25.0% 관세 부과 · 4개월 단위로 수입업자별 쿼터 부여
	'24.1.	전기차	('24.1월) 10% 관세 → ('24.7월) 18% → ('26.7월) 35%로 인상 예정
인도네시아	예정	직물, 전자 등	중국산 직물, 의류, 화장품, 전자제품 등을 공략한 세이프가드 관세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 검토 중
캐나다	'24.10.1.	전기차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 인상(기존 6.1%에 추가 부과)

자료: 언론보도 종합

〈그림6. '23.4월~'24.4월 대중국 반덤핑 조치 및 조사 신규 개시 국가 현황〉

■ 반덤핑 조치 ■ 신규 조사 개시



자료: World Trade Organization, Washington Post(2024) 재인용

- 중국산 저가 철강, 화학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우리 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 덤핑이나 보조금 수혜 여부 및 국내산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 판정에 근거한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검토할 필요

[표]

1. 대상 국가별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23.7월~'24.6월) (p.5)
2.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개요 (p.10)
3.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상·하원 의견서 제출 현황 (p.12)
4. 美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경과 (p.13)
5. 대상 국가별 미국의 우회조사 개시 추이 (p.14)
6. 301조 관세인상 주요 품목별 미국의 대중국 수입 현황 및 상세 내용 (p.18)
7. 301조 관세 인상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주요 의견 (p.21)
8. 커넥티드 차량 ICTS 규정안 주요 내용 (p.27)
9.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 주요 제재 현황 (p.30)
10. 미국의 국가별 반도체 및 전자부품 수입 전년비 변화 추이 (p.32)
11. 총 생산 비용 중 301·232·201조 관세 비중 상위 10개 제조산업 (p.34)
12. 미국 외 제3국 대중국 보호조치 주요 현황 (p.36)

[그림]

1. 미국의 대세계 관세율 추이 (p.2)
2.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 추이 (p.2)
3. 미국의 신규 수입규제 개시 건수 추이 (p.4)
4. 최근 10년간 주요 국가별 선박 건조 점유율 추이 (p.22)
5. 미국의 동남아 4개국産 태양광 셀·모듈 수입 추이 (p.29)
6. '23.4월~'24.4월 대중국 반덤핑 조치 및 조사 신규 개시 국가 현황 (p.36)

[참고]

1. 개정 규정에 제시된 특별시장상황(PMS) (p.6)
2. '정부의 무대응' 판정 시 반덤핑·상계관세율 산정 방법 (p.8)
3. 중국산 철강의 멕시코 경유 우회수출 현황 (p.24)

참고자료

[데이터·사이트]

Bown(2023.4.6.), 'US-China Trade War Tariffs: An Up-to-Date Chart', PIIE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2019/us-china-trade-war-tariffs-date-chart>)

Economist(2023.10.31.), 'Donald Trump's second term would be a protectionist nightmare'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23/10/31/donald-trumps-second-term-would-be-a-protectionist-nightmare>)

US Commerce AD/CVD Case Information

(<https://enforcement.trade.gov/stats/inv-initiations-2000-current.html>)

US Commerce ITA Access (<https://access.trade.gov/>)

US Federal Register (<https://www.federalregister.gov/>)

USITC IDS (<https://ids.usitc.gov/>)

WTO Stats (<https://stats.wto.org/>)

[공고·보고서·기사]

AAPC(2024.6.29.), "AAPC Response to Request for Comments on Tariff Rate Modifications and Other Actions Proposed by USTR for Section 301 Investigation of China".

(<https://www.aiada.org/wp-content/uploads/2024/07/AAPCLetter.pdf>)

Akane Okutsu(2024.5.9.), "U.S. Steel deal will have smooth road after election, Nippon Steel says", Nikkei Asia.

(<https://asia.nikkei.com/Business/Business-deals/U.S.-Steel-deal-will-have-smooth-road-after-election-Nippon-Steel-says>)

Amanda Chu and Demetri Sevastopulo(2024.3.13.), "US solar manufacturers in 'dire situation' as imports soar,"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9afeb8a2-ee25-4455-b917-5f06486abe5b>)

Amanda Chu(2024.5.23.), "The trade dispute dividing the US solar sector,"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53953041-e839-479f-83ad-4384765f9916>)

- Andrew Duehren and Andrew Restuccia(2024.5.14.), "Biden Levies Sweeping Tariffs on China, Intensifying Trade Fight With Trump", The Wall Street Journal.
(<https://www.wsj.com/politics/elections/biden-trump-tariffs-d405cbca>)
- Arit John, Kit Maher, and Alayna Treene(2024.3.17.), "Trump warns of 'bloodbath' for auto industry and country if he loses the election", CNN.
(<https://edition.cnn.com/2024/03/16/politics/trump-bloodbath-auto-industry-election/index.html>)
- Bernd G. Janzen et al.(2023.5.22.), "Proposed Regulations May Significantly Expand Commerce's Enforcement Ability of Trade Remedy Laws",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https://www.akingump.com/en/insights/alerts/proposed-regulations-may-significantly-expand-commerces-enforcement-ability-of-trade-remedy-laws>)
- Bloomberg News(2024.7.19.), "Chinese Firms Are Investing Abroad at Fastest Pace in Eight Years".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4-25/china-firms-are-investing-abroad-at-fastest-pace-in-eight-years?utm_source=website&utm_medium=share&utm_campaign=copy)
- Bloomberg News(2024.7.19.), "Trump Welcomes China to Build Cars in US in Departure From Biden".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4-07-19/trump-welcomes-china-to-build-cars-in-us-in-departure-from-biden>)
- Brett Fortnam(2024.3.22.), "Commerce finalizes sweeping changes to U.S. trade remedy regulations",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commerce-finalizes-sweeping-changes-us-trade-remedy-regulations>)
- Brett Fortnam(2024.4.4.), "Commerce's lifting of transnational subsidy case restriction raises questions",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commerce-s-lifting-transnational-subsidy-case-restriction-raises-questions>)
-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U.S. Department of Commerce(2024.3.1.), "Secur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Connected Vehicles," 89 Fed. Reg. 1506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3/01/2024-04382/securing-the-information-and-communications-technology-and-services-supply-chain-connected-vehicles>)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23.11.15.), "U.S. Commercial Shipbuilding in a Global Context".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2534>)

Colin Grabow, Inu Manak, and Daniel J. Ikenson(2018.6.28.), "The Jones Act: A Burden America Can No Longer Bear," CATO Institute Policy Analysis.

(<https://www.cato.org/publications/policy-analysis/jones-act-burden-america-can-no-longer-bear>)

David Coffin et al(2024.5.), "The impact of Changes in Trade Policies on the Electric Vehicle (EV) Sector - a CGE Analysis," USITC.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working_papers/ev_paper_05072024_ec_working_paper_series.pdf)

David E. Bond, et al.(2024.4.16.), "United States Expands and Strengthens Enforcement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White and Case.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united-states-expands-and-strengthens-enforcement-antidumping-and-countervailing-duty>)

David M. Schwartz and Aaron C. Mandelbaum(2024.3.28.), "Commerce Finalizes Major Overhaul of U.S. Trade Remedy Regulations", Thompson Hine.

(<https://www.thompsonhinesmartrade.com/2024/03/commerce-finalizes-major-overhaul-of-u-s-trade-remedy-regulations/>)

Doug Palmer(2024.5.22.), "International shipowners to Biden: Don't slap port fee on Chinese-made ships," Politico Pro.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4/05/international-shipowners-to-biden-dont-slap-port-fee-on-chinese-made-ships-00159497>)

Doug Palmer(2024.6.10.), "Commerce's 'connected vehicle' probe triggers fear at home and abroad," Politico Pro.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4/06/commerces-connected-vehicle-probe-triggers-fear-at-home-and-abroad-00162477>)

Doug Palmer(2024.6.28.), "Companies press Biden to reconsider China tariff hikes," Politico Pro.

(<https://subscriber.politicopro.com/article/2024/06/companies-press-biden-to-reconsider-china-tariff-hikes-00165797>)

Flaen, Aaron, and Justin Pierce(2019.12.23.). "Disentangling the Effects of the 2018–2019 Tariffs on a Globally Connected U.S. Manufacturing Sector,"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19–086.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feds/files/2019086pap.pdf>)

Frank Chen and Ke Hanyan(2024.6.8.), “Chinese solar panel makers face dilemma as US plugs trade loophole in Southeast Asia,” South China Morning Post.

(<https://www.scmp.com/economy/global-economy/article/3265839/chinese-solar-panel-makers-face-dilemma-us-plugs-trade-loophole-southeast-asia>)

IEA(2024), “Global Critical Minerals Outlook 2024”.

(<https://www.iea.org/reports/global-critical-minerals-outlook-2024>)

Katherine Shin and Eric C. Emerson(2024.7.1.), “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New Regulations in DOC Antidumping Proceedings”, Steptoe.

(<https://www.steptoelaw.com/en/news-publications/global-trade-and-investment-law-blog/particular-market-situation-pms-new-regulations-in-doc-antidumping-proceedings.html>)

James E. Ransdell, Maggie Monday, and Myles S. Getlan(2024.4.4.), “Commerce Regulations Update Scope/Circumvention Procedures, Clarify CVD Practice”, Cassidy Levy Kent(CLK).

(<https://www.cassidylevy.com/news/commerce-regulations-update-scope-circumvention-procedures-clarify-cvd-practice/>)

John Fitzgerald Weaver(2024.5.16.), “Bifacial solar module tariffs reinstated,” PV Magazine.

(<https://pv-magazine-usa.com/2024/05/16/bifacial-solar-module-tariffs-reinstated/>)

Margaret Spiegelman(2024.2.22.), “U.S. adds rebar to monitoring list in developing steel deal with Mexico,”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trade.com/daily-news/us-adds-rebar-monitoring-list-developing-steel-deal-mexico>)

Margaret Spiegelman(2024.4.29.), “USTR official: U.S. assessing Mexico’s new tariffs as steel talks continue,”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trade.com/daily-news/ustr-official-us-assessing-mexico-s-new-tariffs-steel-talks-continue>)

Margaret Spiegelman(2024.7.10.), “U.S., Mexico announce joint actions to counter steel, aluminum transshipment,”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trade.com/daily-news/us-mexico-announce-joint-actions-counter-steel-aluminum-transshipment>)

Nancy Cook, Joshua Green, and Mario Parker(2024.7.16.), “Trump on Taxes, Tariffs, Jerome Powell and More”, Bloomberg.

(<https://www.bloomberg.com/features/2024-trump-interview/>)

- Nichola Groom(2024.7.18.), "Many US solar factories are lagging. Except those China owns," Reuters.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many-us-solar-factories-are-lagging-except-those-china-owns-2024-07-17/>)
-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024.4.22.),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Targeting the Maritime, Logistics, and Shipbuilding Sectors for Dominance," 89 Fed. Reg. 2942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4/22/2024-08515/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chinas-acts-policies-and-practices-targeting-the-maritime>)
- Oliver Ward(2024.7.1.), "Labor groups urge USTR to expand Section 301 tariff hikes to protect U.S. jobs,"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labor-groups-urge-ustr-expand-section-301-tariff-hikes-protect-us-jobs>)
- Oliver Ward(2024.7.3.), "Steel and aluminum industry to USTR: Use 301 tariffs to address diverted Chinese exports," Inside US Trade.
(<https://insidetrade.com/daily-news/steel-and-aluminum-industry-ustr-use-301-tariffs-address-diverted-chinese-exports>)
- Peter Herman et al(2024.6.14.), "Economic Impact of Section 232 and 301 Tariffs on U.S. Industries," US ITC. (<https://www.usitc.gov/publications/332/pub5405.pdf>)
- Reva Goujon(2024.3.5.), "Shut Out: Data Security and Cybersecurity Converge in Next Wave of US Tech Controls," Rhodium Group.
(<https://rhg.com/research/shut-out-data-security-and-cybersecurity-converge-in-next-wave-of-us-tech-controls/>)
- Reva Goujon and Charlie Vest(2024.5.15.), "US-China Trade War, Volume 2,," Rhodium Group.
(<https://rhg.com/research/us-china-trade-war-volume-2/>)
- Reuters(2024.7.19.), "Trump sanctions prompted China Xiaomi's EV entry, CEO says"
(<https://www.reuters.com/business/autos-transportation/trump-sanctions-prompted-china-xiaomis-ev-entry-ceo-says-2024-07-19/>)
- S.3917 – Stop Mexico's Steel Surge Act, 118th Congress (2023–2024)
(<https://www.congress.gov/bill/118th-congress/senate-bill/3917/text>)
- Sarah Bauerle Danzman(2024.7.24.), "China's ability to buy US land near military bases just got more restricted," Atlantic Council.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chinas-ability-to-buy-us-land-near-military-bases-just-got-more-restricted/>)

Shawn M. Higgins and Rajib Pal(2024.4.10.), "Final Amendments to Trade Remedies Regulations May Bring Significant Changes to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Proceedings", Sidley. (<https://www.sidley.com/en/insights/newsupdates/2024/04/final-amendments-to-trade-remedies-regulations-may-bring-significant-changes-to-antidumping>)

SteelOrbis(2024.1.3.), "China claims 59% of new shipbuilding orders in global market in 2023". (<https://www.steelorbis.com/steel-news/latest-news/china-claims-59-of-new-shipbuilding-orders-in-global-market-in-2023-1321647.htm>)

The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24.5.14.), "Four-Year Review of Actions Taken in the Section 301 Investigation: China'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Intellectual Property, and Innovation".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USTR%20Report%20Four%20Year%20Review%20of%20China%20Tech%20Transfer%20Section%20301.pdf>)

The White House(2024.4.17.), "FACT SHEET: Biden-Harris Administration Announces New Actions to Protect U.S. Steel and Shipbuilding Industry from China's Unfair Practic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4/17/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ew-actions-to-protect-u-s-steel-and-shipbuilding-industry-from-chinas-unfair-practices/>)

The White House(2024.5.14.), "FACT SHEET: President Biden Takes Action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Businesses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5/14/fact-sheet-president-biden-takes-action-to-protect-american-workers-and-businesses-from-chinas-unfair-trade-practices/>)

U.S. Commerce ITA(2024.3.25.), "Regulations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89 FR 20766.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4/03/25/2024-05509/regulations-improving-and-strengthening-the-enforcement-of-trade-remedies-through-the-administration#citation-11-p20767>)

U.S. Commerce ITA(2024.5.9.), "Webinar on Updated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Regulations" (<https://www.trade.gov/sites/default/files/2024-05/May%209%2C%202024%20Webinar.pd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2024.4.19.), "Entry Summary (Form 7501)," 88 Fed. Reg. 24203.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3/04/19/2023-08213/entry-summary-form-7501>)

- 김경화(2022), “바이든 정부 1년, 미국 무역구제제도의 운용과 전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리포트 Vol.1.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263>)
- 김나울(2024),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Focus Vol.19.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Focus/tradeFocusDetail.do;JSESSIONID_KITA=01727CD0F20D4D25AB9DC353B9189F06.Hyper?no=2595)
- 도원빈(2024),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효과,”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Brief Vol.6.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Brief/tradeBriefDetail.do?no=2598>)
- 도원빈(2024), “중국 저가수출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Trade Brief Vol.8.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tradeBrief/tradeBriefDetail.do;JSESSIONID_KITA=9C3903A08DB5D9A1395714A45D3CEA59.Hyper?no=2629)
- 박원(2024.6.13.), “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의 수입규제 방향 예측,” 한국경제 CFO Insight.
(<https://marketinsight.hankyung.com/article/202406120395r>)
- 이후권(2021), “CATO : 중국을 통해 바라본 산업정책의 잠재적 우려사항,” KITA 워싱턴 통상정보 430호.
(https://www.kita.net/board/tradeNews/usa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74FC3510AE77EDB92FAC15815844685.Hyper?no=9196)
- 장정훈, 서지현(2024.7.10.), “시대19 - ESS가 EV 캐즘을 극복할 상인가,” 삼성증권.
(https://www.samsungpop.com/common.do?cmd=down&contentType=application/pdf&inlineYn=Y&saveKey=research.pdf&fileName=2020/2024070913020191K_02_17.pdf)
- 정승호(2006), “중국 조선산업 동향 및 시사점,” 산업은행 산은조사월보.
(<http://knsi.org/knsi/kor/center/view.php?no=1789&c=1&m=8>)
- 정혜선(2018), “최근 미국의 특별시장상황(PMS) 적용과 시사점”,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통상리포트 Vol.13.
(<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1808>)
- 황경인(2024),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한국 배터리산업 리스크 분석 - IRA 변화 전망과 국내 산업 영향을 중심으로,” KIET 산업포커스.
(https://www.kiet.re.kr/research/economyDetailView?detail_no=2939&year=&month=&style=&sval=&pg=1&pp=10)
- 繆琦(2024.4.19.), “美国对华发起新301调查, 对中国造船业影响有多少?,” 第一财经.
(<https://www.yicai.com/news/102074607.html>)

〈2024년 KITA 통상리포트 발간 목록〉

No.	제목	작성자	발간일자
10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이유진/한아름	24.09.11
9	한-UAE CEPA 주요 내용 및 우리 수출기업 인식 조사	강금윤/오지인	24.09.03
8	중국 공급과잉에 대한 주요국 대응 및 시사점	이정아/강금윤/오지인	24.08.22
7	인공지능(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정해영	24.07.26
6	미-중 전략경쟁, 레거시 반도체로 전이되나? - 주요국의 레거시 반도체 정책 현황 및 시사점	이유진	24.07.12
5	美 의회 대중국 견제 입법 동향 및 시사점	한아름	24.06.10
4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통상연구실	24.05.24
3	미국의 경제안보 · 핵심기술 통제 전략 강화 및 시사점	정해영/이정아/한주희/고성은	24.02.27
2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강금윤	24.02.20
1	글로벌 공급망에 커진 또 다른 경고등 - 강제노동 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	한아름	24.02.08



TRADE REPORT

20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서울시 강남구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47층
2024. 09. 11